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별 분석

2016.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정부는 예산투입을 통해 다양한 정책프로 그램을 추진해옴.
 - 외환위기 이후 1990년대말부터 15여년간 신규 정책개발을 통해 정부의 예산투 입으로 당시 정책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
- 그러나 소상공인 예산현황이 세부적으로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정책예산에 대한 파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작
 - 총계적 차원의 예산은 파악되었으나 내역사업 단위의 예산을 파악하고 정책유 형을 파악한 것은 2014년부터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지자체의 예산은 지자체 담당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파악하는 데에 애로 발생
- 2조원을 넘어서는 소상공인 예산의 세부적 내용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예산구조 변경을 모색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내역을 내역사업 단위까지 파악하고 내역사업이 어 떤 정책유형에 속하는지를 분석하여 예산구조의 특징 및 과제 등을 도출하고 자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소상공인 예산은 2014~2016년도 예산이며, 2014년 및 2015년 자료는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중앙정부는 부처단위, 지자체는 17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파악
 - 통합관리시스템내의 예산정보(예산규모 및 사업수)를 기본으로 하되 시스템내 에 미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정보는 정책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방문 및 유선연결 등을 통해 예산정보를 확보
- 정책유형은 회계·지원형태·기능·대상·속성 등 다양한 방향에서 분류
 - 정책속성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분담, 정책목표, 정책의 행정적 성격 등으로 세 분화하여 유형화
 - 하나의 정책유형 기준 이외에도 회계유형 및 정책대상 등과 같이 두 개의 정

책유형 기준을 통해서도 예산구조를 파악하고, 이 경우에는 2016년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제도의 지원방식과 내용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 연도별 예산 변화추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경향 파악
 - 정책의 유사·중복성 여부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점검

제2장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별 분류기준

1. 회계유형 및 지원형태별

- 회계유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광특회계)', '기금'으로 구분¹⁾
 -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로 조세수입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무상급부원칙으로 운용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운용,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회계로서 사업수입·목적세·수수료·부담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함.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회계로서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소상공인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음.
 - 기금은 예산과 유사하나 예산의 주된 수입이 조세로서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세입세출 혼동금지의 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합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금은 이러한 원칙의 예외적인 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고 재원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음.
 - 그밖에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은 법령에 의하여 배정·이용·전용·이체 등에 있어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는데 비하여,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재량과 탄력성의 여지가 크게 인정되고 있음.

<표 2-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 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 사업 자금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일정자금을 활용하여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조달 및 운영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	·일반 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기금 고유사업 수행
확정 절차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 의결 확정	좌 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예저장관과의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 절차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좌동	·항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계획 변경	·추경예산의 편성	좌 동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사와 승인	좌 동	좌 동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및 제5조(기금의 설치)

○ 지원형태에 따라, ‘보조’, ‘출연’, ‘융자’ 사업으로 구분²⁾

- 보조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며, 법적 성격은 무상증여에 해당
- 출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
 - 현행 법령에서는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함.
-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함.

2. 기능별 분류

- 기능별로는 인력·교육,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18개 범주로 분류 가능
- 인력·교육은 교육훈련, 창업·경영컨설팅으로 세분화
 - 금융은 보증지원, 융자지원, 이차보전, 자금지원³⁾, 보험료·수수료⁴⁾ 등으로 세분화
 - 혁신·기술은 기술개발·사업화⁵⁾, 디자인·브랜드⁶⁾, 조직화·협업화, 정보화 등으로 세분화
 - 마케팅은 박람회·전시회·축제, 홍보 프로그램,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⁷⁾ 등으로 세분화
 - 인프라는 지원기관 구축·운영⁸⁾,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운영⁹⁾, 소상공인 정보 조사·연구·전파¹⁰⁾ 등으로 세분화

2)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making.law.go.kr>)

3) 자금지원 : 금융지원 중에 보증 및 융자, 이차보전에 해당되지 않거나, 다양한 금융지원을 망라하여 혼합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에 포함시킴(예 : 착한가격업소 지원, 온누리 상품권 판매 보조, 인센티브 제공, 우수숙박시설 지원육성,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정액) 등)

4) 보험료·수수료 등 : 음식점소 배상 책임보험료지원(1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료,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행 수수료,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수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

5) 기술개발·사업화 : SW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공예 관광 기념품 품질 및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 등

6) 디자인·브랜드 :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다시 살릴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모범음식점 관리, 나들가게 판매지원 사업 등

7)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 :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대체숙박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등

8) 지원기관 구축·운영 : 봉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설치 운영, 소상공인 창업 경영 개선지원 사업 등

9)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운영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10) 소상공인 정보 조사·연구·전파 : 소상공인 성장 기반 조성,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원 사업 등

<표 2-2> 예산 관련 소상공인 정책의 기능별 분류 기준

5대 기능 분류	세부 기능 분류
인력·교육	- 교육훈련 - 창업·경영컨설팅
금 융	- 보증지원 - 융자지원 - 이차보전 - 자금지원 - 보험료·수수료
혁신·기술	- 기술개발·사업화 - 디자인·브랜드 - 조직화·협업화 - 정보화
마 케 팅	- 박람회·전시회·축제 등 - 홍보 프로그램 -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
인 프 라	- 지원기관 구축·운영 -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운영 - 소상공인 정보 조사·연구·전파 등

3. 생애주기별

○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주기를 네가지로 구분

- 생애주기는 창업(준비단계 포함),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¹¹⁾ 등 네 가지로 구분
 - 창업 및 성장은 창업단계에서도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

4. 정책대상별 분류

○ 소상공인을 총 9개로 구분하여 분류

- 9개 분류 대상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전체), 소공인, 슈퍼마켓·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기타로 구성
- 기타는 정책이 빈번하게 시행되지는 않지만 미용업 등과 같이 일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경우

5. 정책속성별 분류¹²⁾

○ 회계유형 및 지원형태, 기능, 생애주기, 정책대상 이외에 정책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확장하여 소상공인 정책을 분류

11) 퇴로 및 안전망 사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 등이 이에 포함

12) 본 연구에서는 예산 관련 소상공인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책속성별 분류인 급부·규제·침해 행정별 분류는 이론적인 논의만 서술하고 현황분석에서는 제외

- 추가적인 기준으로는 정부역할과 정책목표, 행정적 성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정부의 역할분담 기준

-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역할분담을 기준으로 매칭분담·독자담당, 협력형·독자형·병렬형 등으로 구분
- 매칭분담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분담하는 경우, 독자담당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
- 협력형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 독자형 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각각 유사·중복성이 없거나 연계없이 추진하는 정책, 병렬형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기능으로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

<표 2-3>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의 개념과 차이

정책유형	내 용
협력형	(공동협력형) 동일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예산분담 또는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계협력형) 중앙정부·지자체간에 서로 다른 사업이 정책대상·기능·생애주기 등에서 1개라도 상이하거나 정책대상·기능·생애주기 등이 동일하더라도 정책공급 과정에서 상호대체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형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정책대상·기능·생애주기 등에서 1개라도 상이하고, 모두가 동일하더라도 정책내용이 상이한 경우
병렬형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정책대상·기능·생애주기 등이 동일하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등 세부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혼합형	중앙정부 특정사업이 여러 지자체 사업과의 관계에서 연계협력·독자·병렬형 등 다양한 관계를 이루는 경우에 혼합형으로 별도 분류

- 매칭분담·독자담당정책과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간 관계는 <표 2-4>와 같음.
- 1사업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분담정책은 협력형정책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독자담당 형태로 수행하는 정책이 2사업간에 연계성을 갖게 되면 협력형 정책이 됨.
- 매칭분담 방식의 협력형정책은 공동협력형 정책, 독자담당 방식의 협력형정책은 연계협력형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독자담당 형태로 수행하는 정책이 2사업간에 중복성이 없거나 연계성이 없으면 독자형정책이 되고, 중복된다면 병렬형정책이 됨.
- 그런데,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시 중앙정부 정책은 혼합형 정책의

성격을 띄게 됨.

- 즉,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개별 지자체간에도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지자체의 특정사업과는 연계협력형의 관계에, 또 다른 지자체의 특정사업과는 병렬형의 관계에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유형이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

<표 2-4> 매칭분담·독자담당정책과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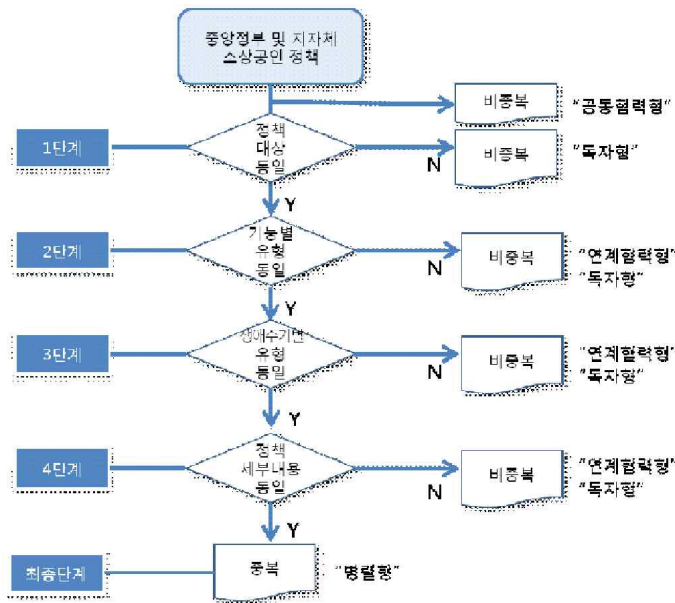
정책유형	역할분담 여부	정책유형
매칭분담	1사업내 공동	(공동)협력형
독자담당	2사업간 연계	(연계)협력형→혼합형
	2사업간 비중복·비연계	독자형→혼합형
	2사업간 중복	병렬형→혼합형

- 따라서 정책의 역할분담 기준은 정책의 유사·중복성과 같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전달체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협력형·연계협력형·독자형·병렬형 등의 구분을 위한 기본절차는 <그림 2-1>과 같음.
- 즉,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정책의 연계성 그리고 정책의 연계성이 협력적이거나 아니면 유사·중복적이거나 등과 같은 논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 가능
- 정책의 역할분담 현황을 분류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동일 사업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역할을 매칭분담하는 경우에는 공동협력형 정책에 해당하므로 중복성 평가에 앞서 사전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단계에서 정책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정책은 독자형 정책으로 분류함.
- 2단계에서 정책대상이 동일한 정책내에서 기능별 유형이 같은지를 비교분석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정책대상이 동일하더라도 기능별 유형이 다르면 중복성 정책이 아니며, 연계형 정책 또는 독자형 정책에 속함.
- 3단계에서 동일 정책대상에게 동일 기능으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생애주기가 같은지로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생애주기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성이 없는 정책으로 연계형 정책 또는 독자형 정책에 속함.
- 1-3단계를 거친 후에 4단계에서 정책의 세부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에 병

별형 사업으로 분류

- 중앙부처에서의 정책유형인 혼합형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와의 정책유형 분류과정에서 동일한 중앙부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에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책유형이 변화되는 경우의 정책유형¹³⁾
- 중앙부처의 혼합형 사업중 병렬형을 포함한 경우는 중복성을 갖는 사업으로 분류

<그림 2-1> 정책의 유사·중복성 평가 기본절차¹⁴⁾



(2) 정책목표 기준

-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 적응, 불리시정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목표 기준으로 구분 가능
- 소상공인의 보호 정책은 소상공인을 시장에 있어서의 도태과정에서 보호하려

13) A라는 지자체에서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 중앙부처의 정책유형은 독자형으로 분류되나, B라는 지자체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중앙부처의 정책유형은 병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사업은 혼합형 정책유형으로 구분

14) <그림 2-1>은 기본절차로서 정책대상별 및 생애주기별이 동일하더라도 기능별이 다른 경우에도 연계협력형 또는 독자형으로 분류

는 정책으로서 사회정책의 일부로도 생각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육성 정책은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양성하는 혁신적 소상공인의 배출 등과 같은 정책
- 적응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임.
- 불리시정 정책은 시장질서의 유지 관점에서 대기업과 평등한 경쟁조건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인 적응정책과 달리 소극적인 경쟁조건 정비 정책임.¹⁵⁾

- 보호·적응·불리시정 정책유형을 중소기업 관련법과 관련하여 정책유형을 구분한 최세경·오동윤·한국중소기업학회(2014)에 준거하여 소상공인 정책은 <표 2-5>와 같이 분류
- 소상공인 육성정책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응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응정책에 포함하여 분류(최세경·오동윤·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p. 62)

15) 불리시정 정책의 방법으로는 대기업이 행하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과 대기업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대항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대항력을 형성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호정책과 같게 되고, 불리시정이 대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적응정책이 됨(이윤보, 2014 참고)

<표 2-5> 정책목표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

유형	정책목표	정책수단
보호 정책	사업영역 보호	사업조정, 적합업종
	건전한 유통질서	대규모 점포 및 SSM 영업규제, 입점거리 제한
	소상공인 기술보호	기술보호 지원 및 성과물 보호
적응 정책	소상공인 구조 고도화	자동화
		정보화, 신사업 발굴
		물류현대화
		협동화(공동사업 및 협업)
		가업승계
		사업전환 촉진, 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촉진, 해외창업
		창업촉진 및 재창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시장정비 촉진, 상권활성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인력수급 원활화 및 고도화, 인식개선 등
		기금조성 및 신용보증 등 자금공급
		소상공인 국내외 판로지원, 전용매장 설치 등
불리 시정 정책	소상공인 경제적 기회균등	거래공정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구매 등
		여성 소상공인 지원 및 차별관행 시정, 공공구매 등
		장애 소상공인 창업지원, 자금지원 우대, 공공구매 등

(3) 정책의 행정적 성격 기준¹⁶⁾

-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을 최세경·오동운·한국중소기업학회(2014)에서 거론된 소상공인 정책의 행정적 성격에 따라 급부행정·규제행정·침해행정 정책으로 분류
 - 행정적 성격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국가가 수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 행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 정책유형은 남궁근(2008)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의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기업 등 일부 집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제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서 규제행정과 침해행정으로 구분 가능
 -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급부행정에 해당¹⁷⁾

- 급부행정은 사회구성원 또는 정책대상을 배려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유형

16) 행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최세경·오동운·한국중소기업학회(2014), pp. 63-66를 참고

17) 조장행정이라고도 지칭됨.

- 급부행정으로서의 소상공인 정책은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을 경제의 한 주체이며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공동체 유지와 형성측면에서 배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또는 자유 시장질서가 발생시키는 폐단으로부터 소상공인이 겪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임.
- 급부행정은 사회보장행정,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행정, 자금을 보조하는 조성행정으로 세분화 할 수 있음.
 - 대부분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사회보장에서 급부행정이 존재하므로 급부행정에는 시장실패가 예견되는 소상공인의 자금·정보·인력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해당
 -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보험 관련 보조금 지급 등이 해당

- 규제행정은 전체 사회질서의 조정과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 또는 정책대상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유형
- 규제행정으로서의 소상공인 정책은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의 행위 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부담을 가하는 정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등록·신고와 같은 시장진입 규제
 - 소상공인간 또는 소상공인과 여타 규모의 기업간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 소상공인과 소비자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상공인 활동과 행위를 규제하는 가격 또는 품질규제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행정활동을 목적으로 자료제출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의무를 소상공인에게 요구하는 행정규제
- 침해행정은 정책대상을 위해 다른 사회적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유형
- 침해행정으로서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행위 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정책
 -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규제 및 입점규제
 - 중소상공인의 시장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표 2-6> 행정적 성격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

유형	세부 내용	정책수단
급부행정	사회보장행정	세제지원, 고용보험 관련 보조금 지급 등
	공급행정	정보,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조성행정	자금융자 또는 보조
규제행정	시장진입규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거래규제	소상공인간, 소상공인과 대기업·중견기업간 거래 관련
	가격 또는 품질규제	소비자 권익 관련 소상공인 활동과 행위를 규제
	행정규제	행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의무
침해행정	사업영역보호	적합업종제도, 사업조정제도
	중소상인보호	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규제, 입점규제
	중소상공인 시장참여기회 확대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3장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별 현황

1. 개요

(1) 종합

-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한 소상공인에 대한 '16년 예산 총계는 '15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여 22,732억 원
- 사업건수로 본 소상공인 정책은 '16년 현재 375개로 분석기간인 '14 ~ '16년 중 지속적으로 증가¹⁸⁾

<표 3-1> 예산규모로 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 역할분담

(단위 : 1억 원, 건수)

구분	연도	중앙부처	지자체	총계
금액(비중)	2014	88.6% (14,187)	11.4% (1,824)	100.0% (16,011)
	2015	89.5% (20,291)	10.5% (2,383)	100.0% (22,674)
	2016	91.1% (20,700)	8.9% (2,032)	100.0% (22,732)
건수	2014	13.8% (43)	86.2% (268)	100.0% (311)
	2015	18.1% (63)	81.9% (285)	100.0% (348)
	2016	18.7% (70)	81.3% (305)	100.0% (375)

18) 예산관련 사업건수는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중 중앙정부의 금융지원·정보인프라·네트워크 등의 부분은 세내역 사업단위에서 정리함.

(2) 중앙부처

-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관련 중앙부처 '16년 예산규모는 '15년에 비해 409억 원 증가한 20,700억 원이고, 사업수도 '15년 63개에서 '16년 70개로 증가
- '16년 현재 사업수는 중기청 사업이 65개이며, 4개 부처(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5개 사업 수행
- 중기청 사업수는 '15년에 비해 7개 증가
- 고용노동부(2개) :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 미래창조과학부(1개) : SW전문인력역량강화
- 문화관광부(1개)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 여성가족부(1개)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표 3-2> 중앙부처의 소상공인 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 1억 원, 건수)

구분	2014		2015		2016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중소기업청	99.1% (14,057)	88.4% (38)	99.5% (20,198)	92.1% (58)	99.7% (20,637)	92.9% (65)
고용노동부	0.3% (43)	4.7% (2)	0.1% (29)	3.2% (2)	0.0% (6)	2.9% (2)
미래창조과학부	0.0% (5)	2.3% (1)	0.0% (5)	1.6% (1)	0.0% (5)	1.4% (1)
문화관광부	0.2% (25)	2.3% (1)	0.1% (24)	1.6% (1)	0.1% (18)	1.4% (1)
여성가족부	0.4% (57)	2.3% (1)	0.2% (35)	1.6% (1)	0.2% (34)	1.4% (1)
소계	100.0% (14,187)	100.0% (43)	100.0% (20,291)	100.0% (63)	100.0% (20,700)	100.0% (70)

주 : ()는 소계 대비 비중

(3) 지자체

- 17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규모는 '15년 2,383억 원에서 '16년에는 2,302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사업수로는 '15년 285개에서 '16년 305개로 증가
- 서울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수도 '16년 30개로 가장 많은 수준
- 지자체 소상공인 관련 예산 및 사업수는 지자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3-3> 지자체의 소상공인 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 1억 원)

구 분	2014		2015		2016	
	예 산	사업 수	예 산	사업 수	예 산	사업 수
강원	2.9% (53)	7.8% (21)	4.8% (114)	8.1% (23)	3.7% (75)	7.9% (24)
경기	1.4% (26)	5.2% (14)	3.8% (91)	6.3% (18)	4.1% (83)	8.2% (25)
경남	3.4% (62)	8.2% (22)	4.7% (112)	7.7% (22)	5.2% (106)	5.2% (16)
경북	12.0% (219)	5.6% (15)	7.7% (183)	5.3% (15)	8.7% (177)	5.2% (16)
광주	3.0% (54)	8.2% (22)	6.3% (149)	9.8% (28)	2.9% (59)	5.6% (17)
대구	2.0% (36)	3.0% (8)	4.9% (117)	3.9% (11)	5.0% (102)	6.2% (19)
대전	1.2% (21)	2.6% (7)	1.1% (26)	4.2% (12)	2.2% (45)	5.9% (18)
부산	17.7% (323)	5.2% (14)	16.4% (390)	4.9% (14)	17.8% (361)	5.9% (18)
서울	28.3% (517)	11.2% (30)	23.8% (568)	10.9% (31)	30.2% (614)	9.8% (30)
세종	0.6% (11)	2.2% (6)	0.8% (20)	2.8% (8)	0.6% (11)	2.3% (7)
울산	1.8% (33)	1.5% (4)	2.0% (47)	1.8% (5)	0.7% (14)	2.3% (7)
인천	3.0% (55)	3.4% (9)	4.4% (105)	3.2% (9)	2.3% (48)	2.6% (8)
전남	3.0% (54)	1.5% (4)	6.8% (163)	3.9% (11)	6.0% (123)	6.9% (21)
전북	2.9% (53)	9.0% (24)	1.8% (43)	8.4% (24)	3.1% (64)	5.2% (16)
제주	1.7% (31)	10.4% (28)	1.3% (31)	8.1% (23)	2.3% (47)	8.2% (25)
충남	4.7% (87)	4.1% (11)	4.8% (114)	3.5% (10)	2.5% (51)	3.6% (11)
충북	10.5% (191)	10.8% (29)	4.7% (112)	7.4% (21)	2.6% (53)	8.9% (27)
소계	100% (1,824)	100% (268)	100% (2,383)	100% (285)	100.0% (2,032)	100.0% (305)

주 : ()는 소계 대비 비중

2. 기본적인 유형분류별 현황¹⁹⁾

(1) 회계유형 및 지원형태별

- 금액기준으로 본 회계유형으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기금 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기금이며, 기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광특회계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지자체의 경우는 가장 많은 비중이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규모는 '15년에 정점을 보인 후 '16년에 감소한 반면 기금 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 후 '16년에 증가
- '16년 현재 중앙부처 예산규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금의 비중은 96.0%, 지자체 예산규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비중은 80.7%
 - (일반회계) '16년 중앙부처 5억 원, 지자체 1,639억 원 → 전체사업의 7.2%(1,644억 원)
 - (광특회계) '16년 중앙부처 816억 원 → 전체사업의 3.6%(816억 원)
 - (기금) '16년 중앙부처 19,879억 원, 지자체 393억 원 → 전체사업의 89.2%(20,272억 원)

<표 3-4> 회계유형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 1억 원)

2014		2015		2016	
중앙부처 (14,187)	지자체 (1,824)	중앙부처 (20,291)	지자체 (2,383)	중앙부처 (20,700)	지자체 (2,032)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0.0% (5)	81.6% (1,490)	0.0% (5)	89.2% (2,126)	0.0% (5)	80.7% (1,639)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10.0% (1,423)	- (-)	4.1% (822)	- (-)	3.9% (816)	- (-)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89.9% (12,759)	18.4% (335)	95.9% (19,464)	10.8% (257)	96.0% (19,879)	19.3% (393)

주 : ()는 금액

- 건수 기준으로 본 회계유형으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기금이며, 기금 사업건수는 지속적으로 증

19) 2가지 유형으로 분석된 복합적인 유형분류별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1>에 수록

- 가하여 '14년 40개에서 '16년에 67개
- 지자체의 경우는 가장 많은 비중이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사업건수가 '15년에 정점을 보인 후 '16년에 감소한 반면 기금 사업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16년 현재 중앙부처 사업수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금의 비중은 95.7%, 지자체 사업수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비중은 80.9%
- (일반회계) '16년 중앙부처 1개, 지자체 247개 → 전체사업의 66.1%(248개)
- (광특회계) '16년 중앙부처 2개 → 전체사업의 0.5%(2개)
- (기금) '16년 중앙부처 67개, 지자체 58개 → 전체사업의 33.3%(125개)

<표 3-5> 회계유형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단위: 개)

2014		2015		2016	
중앙부처 (43)	지자체 (268)	중앙부처 (63)	지자체 (285)	중앙부처 (70)	지자체 (305)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2.3% (1)	89.6% (240)	1.6% (1)	89.8% (256)	1.4% (1)	80.9% (247)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4.7% (2)	- (-)	3.2% (2)	- (-)	2.9% (2)	- (-)
③ 기금	③ 기금	③ 기금	③ 기금	③ 기금	③ 기금
93.0% (40)	10.4% (28)	95.2% (60)	10.2% (29)	95.7% (67)	19.1% (58)

주: ()는 건수

- 금액기준의 지원형태로 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융자 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융자이며, 융자와 보조 규모는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출연 규모는 '15년에 정점을 보인 후에 '16년에 감소
- 지자체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보조이며, 보조와 출연 규모는 '15년에 정점을 보인 후에 '16년에 감소한 반면 융자 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 후에 '16년 증가
- '16년 현재 중앙부처 예산규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융자의 비중은 75.1%, 지자체 예산규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 비중은 53.7%
- (출연) '16년 중앙부처 500억 원, 지자체 513억 원 → 전체사업의 4.5%(1,013억 원)
- (융자) '16년 중앙부처 15,552억 원, 지자체 427억 원 → 전체사업의 70.3%(15,979억 원)

- (보조) '16년 중앙부처 4,648억 원, 지자체 1,092억 원 → 전체사업의 25.3%(5,740억 원)

<표 3-6> 지원형태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1억 원)

2014		2015		2016	
중앙부처 (14,187)	지자체 (1,824)	중앙부처 (20,291)	지자체 (2,383)	중앙부처 (20,700)	지자체 (2,032)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3.9% (548)	30.8% (561)	4.2% (860)	24.4% (582)	2.4% (500)	25.2% (513)
② 융자	② 융자	② 융자	② 융자	② 융자	② 융자
72.9% (10,341)	19.7% (360)	73.9% (14,994)	11.8% (281)	75.1% (15,552)	21.0% (427)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23.2% (3,297)	49.5% (903)	21.9% (4,437)	63.8% (1,520)	22.5% (4,648)	53.7% (1,092)

주: ()는 금액

- 건수기준의 지원형태로 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보조이며, '14년-16년 중 지속적으로 보조 사업수가 증가
- 지자체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보조이며, '14년-'16년 중 지속적으로 보조 사업수가 증가하고 융자 사업수도 '16년에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출연 사업수 '16년에 전년 대비 감소
- '16년 현재 중앙부처 사업수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의 비중은 84.3%, 지자체 사업수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 비중은 84.9%
- (출연) '16년 중앙부처 2개, 지자체 20개 → 전체사업의 5.9%(22개)
- (융자) '16년 중앙부처 9개, 지자체 26개 → 전체사업의 9.3%(35개)
- (보조) '16년 중앙부처 59개, 지자체 259개 → 전체사업의 84.8%(318개)

<표 3-7> 지원형태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 개)

2014		2015		2016	
중앙부처(43)	지자체(268)	중앙부처(63)	지자체(285)	중앙부처(70)	지자체(305)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2.3% (1)	11.2% (30)	3.2% (2)	10.5% (30)	2.9% (2)	6.6% (20)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18.6% (8)	4.9% (13)	12.7% (8)	4.6% (13)	12.9% (9)	8.5% (26)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79.1% (34)	84.0% (225)	84.1% (53)	84.9% (242)	84.3% (59)	84.9% (259)

주 : ()는 건수

(2) 기능별

- 금액기준으로 기능별 사업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금융 기능의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이며, 인프라, 혁신·기술, 인력·교육, 마케팅 기능 순으로 많은 비중
 - 금융과 인력·교육 기능의 예산규모는 '14-'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마케팅 기능의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혁신·기술 기능과 인프라 기능의 예산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 금액기준의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금융 기능의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혁신·기술, 인력·교육, 마케팅 기능 순으로 많은 비중
 - 금융과 인프라 기능 예산규모는 '14년-'16년 지속적으로 증가
 - 혁신·기술 기능의 예산규모는 '15년 정점에서 '16년에 소폭 감소
 - 인력·교육 기능의 예산규모는 '14년-'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마케팅 기능의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금액기준 지자체 사업의 경우, '14년에 금융 기능의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5년에는 인프라 기능의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6년에는 다시 금융 기능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금융기능과 마케팅 기능의 예산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감소 후 '16년에 증가하고, 인력·교육 기능과 인프라 기능의 예산규모는 '15년에 전년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 반면 혁신·기술 기능의 예산규모는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표 3-8> 기능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1억 원)

구 분		인력 교육	금융	혁신 기술	마케팅	인프라	총계
중앙 부처	2014	2.7% (380)	79.5% (11,281)	4.3% (609)	2.7% (376)	10.9% (1,540)	100.0% (14,187)
	2015	3.6% (732)	80.0% (16,238)	5.5% (1,118)	1.1% (222)	9.8% (1,980)	100.0% (20,291)
	2016	3.7% (768)	80.0% (16,563)	5.1% (1,049)	0.9% (180)	10.3% (2,139)	100.0% (20,700)
지자체	2014	3.3% (59)	57.6% (1,050)	2.9% (54)	4.8% (88)	31.4% (573)	100.0% (1,824)
	2015	3.3% (78)	39.9% (951)	2.7% (65)	3.1% (75)	51.0% (1,215)	100.0% (2,383)
	2016	3.3% (67)	47.6% (967)	4.9% (100)	4.5% (91)	39.7% (807)	100.0% (2,032)
전체	2014	2.7% (439)	77.0% (12,331)	4.1% (663)	2.9% (464)	13.2% (2,113)	100.0% (16,011)
	2015	3.6% (810)	75.8% (17,189)	5.2% (1,182)	1.3% (297)	14.1% (3,195)	100.0% (22,674)
	2016	3.7% (836)	77.1% (17,530)	5.1% (1,149)	1.2% (271)	13.0% (2,946)	100.0% (22,732)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기능별 사업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마케팅 기능의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혁신·기술 기능의 사업수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
 - '14-'16년 모든 기능별로 사업수가 증가
- 건수기준으로 중앙부처 사업을 살펴보면, 혁신·기술 기능의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마케팅 기능의 사업수가 가장 적은 비중
 - 인력·교육 기능, 금융 기능, 인프라 기능의 사업수는 모두 '14-'16년 지속적으로 증가
 - 혁신·기술 기능, 마케팅 기능의 사업수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 건수기준의 지자체 사업을 살펴보면, 마케팅 기능의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인력·교육 기능, 혁신·기술 기능, 마케팅 기능의 사업수가 '14-'16년 지속적으로 증가
 - 금융 기능의 사업수 비중은 '15년에 전년 대비 감소 후 '16년에 증가한 반면 인프라 기능의 사업수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표 3-9> 기능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 개)

구 분		인력 교육	금융	혁신 기술	마케팅	인프라	총계
중앙 부처	2014	18.6% (8)	27.9% (12)	25.6% (11)	9.3% (4)	18.6% (8)	100.0% (43)
	2015	19.0% (12)	22.2% (14)	30.2% (19)	7.9% (5)	20.6% (13)	100.0% (63)
	2016	21.4% (15)	21.4% (15)	25.7% (18)	5.7% (4)	25.7% (18)	100.0% (70)
지자체	2014	15.7% (42)	22.8% (61)	11.6% (31)	29.1% (78)	20.6% (56)	100.0% (268)
	2015	16.5% (47)	21.4% (61)	11.6% (33)	28.1% (80)	22.5% (64)	100.0% (285)
	2016	15.4% (47)	21.6% (66)	13.4% (41)	28.9% (88)	20.7% (63)	100.0% (305)
전체	2014	16.1% (50)	23.5% (73)	13.5% (42)	26.4% (82)	20.6% (64)	100.0% (311)
	2015	17.0% (59)	21.6% (75)	14.9% (52)	24.4% (85)	22.1% (77)	100.0% (348)
	2016	16.5% (62)	21.6% (81)	15.7% (59)	24.5% (92)	21.6% (81)	100.0% (375)

주 : ()는 건수

(3) 생애주기별

- 금액기준의 생애주기별 사업을 살펴보면, 성장단계 사업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4-'16년 중 성장단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창업단계, 창업 및 성장단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퇴로 및 안전망 단계의 예산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16년에 상당 규모가 감소
- 금액기준의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성장단계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성장단계 예산규모는 '14-'16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창업단계, 창업 및 성장단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퇴로 및 안전망 단계 예산규모 '15년은 전년 대비 99% 정도 증가했으나, '16년에 들어 50% 이상 감소
- 금액기준으로 본 지자체 사업의 경우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성장단계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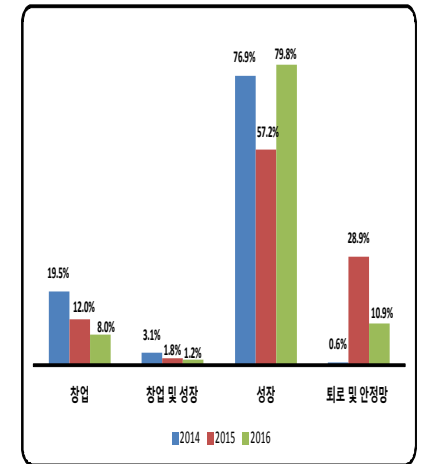
- '14-'16년 창업단계, 성장단계 예산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 창업 및 성장단계 예산규모는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 퇴로 및 안전망 단계 예산규모 '15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후에 '16년도에 전년 대비 74% 증가

<표 3-10> 생애주기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중앙 부 처	'14	21.9% (3,101)	0.2% (25)	77.4% (10,987)	0.5% (73)
	'15	13.3% (2,705)	0.1% (24)	54.3% (11,024)	32.2% (6,538)
	'16	8.7% (1,802)	0.1% (18)	79.6% (16,487)	11.6% (2,393)
지 자 체	'14	1.0% (18)	25.6% (467)	72.2% (1,317)	1.2% (23)
	'15	0.8% (19)	16.2% (387)	82.1% (1,956)	0.9% (22)
	'16	1.3% (27)	12.7% (259)	81.8% (1662)	4.1% (84)
전 체	'14	19.5% (3,119)	3.1% (492)	76.9% (12,305)	0.6% (96)
	'15	12.0% (2,724)	1.8% (411)	57.2% (12,980)	28.9% (6,560)
	'16	8.0% (1,829)	1.2% (277)	79.8% (18,149)	10.9% (2,477)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본 생애주기별 사업은 예산규모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장단계 사업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
 - '14-'16년 성장단계, 퇴로 및 안전망 단계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 창업 및 성장단계 사업수는 '16년에 이전의 17개에서 14개로 감소하였고, 창업 단계 사업수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 건수로 본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성장단계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
 - 3년간 창업 및 성장단계 사업수는 1개로 유지된 반면 나머지 단계의 사업수는 모두 증가
- 건수기준의 지자체 사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성장단계 사업
 - 창업단계 사업수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하였고, 창업 및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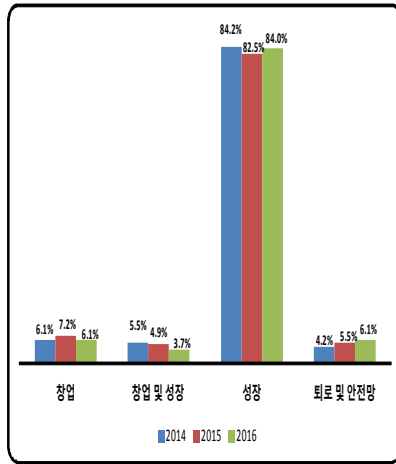
장단계 사업수도 '16년에 감소

- 반면 성장단계, 퇴로 및 안전망 단계 사업수는 증가하였고, 특히 퇴로 및 안전망 단계 사업수가 '15년 8개에서 '16년 12개로 증가

<표 3-11> 생애주기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중앙부처	'14	20.9% (9)	2.3% (1)	60.5% (26)	16.3% (7)
	'15	19.0% (12)	1.6% (1)	61.9% (39)	17.5% (11)
	'16	22.9% (16)	1.4% (1)	60.0% (42)	15.7% (11)
지자체	'14	3.7% (10)	6.0% (16)	88.1% (236)	2.2% (6)
	'15	4.6% (13)	5.6% (16)	87.0% (248)	2.8% (8)
	'16	2.3% (7)	4.3% (13)	89.5% (273)	3.9% (12)
전체	'14	6.1% (19)	5.5% (17)	84.2% (262)	4.2% (13)
	'15	7.2% (25)	4.9% (17)	82.5% (287)	5.5% (19)
	'16	6.1% (23)	3.7% (14)	84.0% (315)	6.1% (23)



주 : ()는 건수

- '14-'16년 생애주기별에 대해 기능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금융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이고, 사업수 기준으로는 마케팅 기능
- '14년에는 금액기준으로는 성장단계의 금융기능, 사업수 기준으로는 성장단계의 마케팅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
- '15년에는 금액기준으로는 성장단계의 금융기능, 사업수 기준으로는 성장단계의 마케팅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
- '16년에는 금액기준으로는 성장단계의 금융 기능, 사업수 기준으로는 성장단계의 마케팅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

(2014)

<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0.6% (9)	0.3% (4)	1.9% (37)	0.0% (0)	2.7% (50)
금융	18.4% (4)	2.6% (10)	55.7% (53)	0.3% (6)	77.0% (73)
혁신.기술	0.0% (1)	0.2% (1)	4.0% (40)	0.0% (0)	4.1% (42)
마케팅	0.0% (1)	0.0% (0)	2.9% (81)	0.0% (0)	2.9% (82)
인프라	0.5% (4)	0.0% (2)	12.3% (51)	0.3% (7)	13.2% (64)
총계	19.5% (19)	3.1% (17)	76.9% (262)	0.6% (13)	100.0% (311)



(2015)

<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6% (13)	0.2% (4)	1.4% (41)	0.4% (1)	3.6% (59)
금융	10.2% (5)	1.5% (10)	37.0% (53)	27.1% (7)	75.8% (75)
혁신.기술	0.0% (2)	0.1% (1)	5.1% (49)	0.0% (0)	5.2% (52)
마케팅	0.0% (1)	0.0% (0)	0.9% (83)	0.4% (1)	1.3% (85)
인프라	0.3% (4)	0.0% (2)	12.9% (61)	0.9% (10)	14.1% (77)
총계	12.0% (25)	1.8% (17)	57.2% (287)	28.9% (19)	100.0%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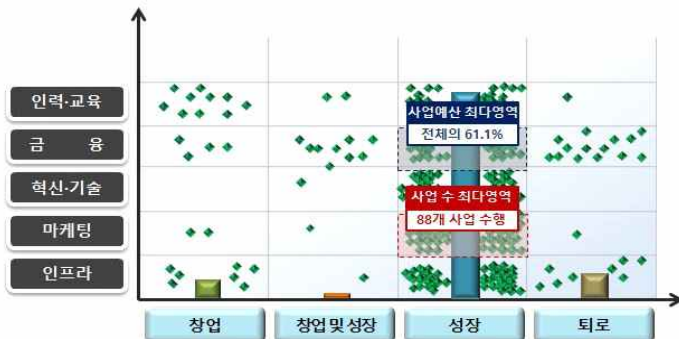


(2016)

◇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 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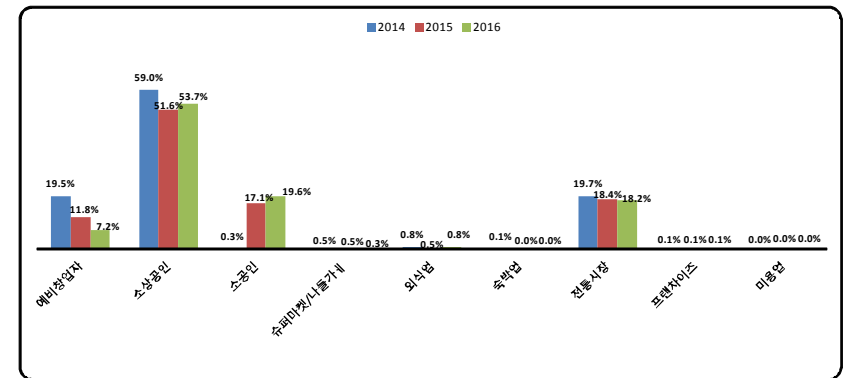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7% (10)	0.2% (2)	1.4% (49)	0.4% (1)	3.7% (62)
금융	6.0% (4)	0.9% (9)	61.1% (55)	9.1% (13)	77.1% (81)
혁신·기술	0.0% (0)	0.1% (1)	5.0% (58)	0.0% (0)	5.1% (59)
마케팅	0.0% (2)	0.0% (1)	0.8% (88)	0.3% (1)	1.2% (92)
인프라	0.3% (7)	0.0% (1)	11.6% (65)	1.0% (8)	13.0% (81)
총계	8.0% (23)	1.2% (14)	79.8% (315)	10.9% (23)	100.0% (375)



(4) 정책대상별

- 금액기준의 정책대상별 사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전체)을 대상으로 한 예산 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인 가운데 소공인의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
- 예비창업자 대상 예산규모는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전통시장 대상 예산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소폭 감소



- 금액기준의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전체)을 대상으로 한 예산규모의 비중이 가장 많고, 소공인 대상 예산규모는 3년간 크게 증가
- 예비창업자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통시장 대상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슈퍼마켓·나들가게 대상 예산규모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하고, 프랜차이즈 대상 예산규모는 '16년에 증가
- 금액기준의 지자체 사업의 경우, '14년에 가장 많은 비중이었던 소상공인(전체) 예산규모는 '15년부터 전통시장 대상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예비창업자, 소공인 대상 예산규모는 '16년에 감소하였고, 외식업에 대한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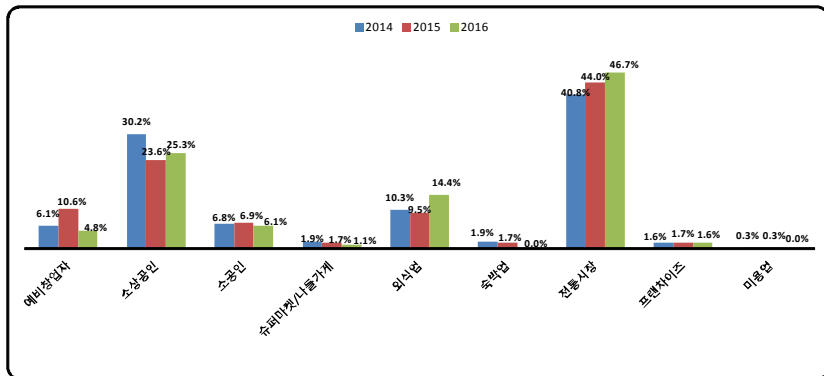
<표 3-12> 정책대상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예비 창업자	소상 공인 (전체)	소공인 (제조업)	소상인			전통 시장	프랜 차이즈	기타
					슈퍼마켓/ 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중 앙 부 처	'14	21.9% (3,101)	60.1% (8,532)	0.3% (38)	0.4% (57)	- (-)	- (-)	17.2% (2,444)	0.1% (15)	- (-)
	'15	13.1% (2,654)	53.5% (10,858)	19.0% (3,856)	0.3% (69)	- (-)	- (-)	14.0% (2,839)	0.1% (15)	- (-)
	'16	7.8% (1,623)	54.7% (11,319)	21.5% (4,453)	0.3% (62)	- (-)	- (-)	15.5% (3,219)	0.1% (25)	- (-)
지 자 체	'14	0.9% (17)	50.5% (922)	0.8% (15)	1.0% (18)	7.2% (132)	0.6% (12)	38.7% (707)	0.1% (2)	0.0% (0)
	'15	0.7% (17)	35.3% (842)	0.6% (15)	1.7% (41)	5.1% (123)	0.4% (9)	56.0% (1,334)	0.1% (2)	0.0% (0)
	'16	0.7% (14)	43.9% (892)	0.4% (8)	0.2% (5)	9.1% (184)	- (-)	45.6% (926)	0.2% (3)	- (-)
전 체	'14	19.5% (3,118)	59.0% (9,454)	0.3% (53)	0.5% (74)	0.8% (132)	0.1% (12)	19.7% (3,150)	0.1% (17)	0.0% (0)
	'15	11.8% (2,671)	51.6% (11,700)	17.1% (3,871)	0.5% (110)	0.5% (123)	0.0% (9)	18.4% (4,174)	0.1% (17)	0.0% (0)
	'16	7.2% (1,638)	53.7% (12,211)	19.6% (4,461)	0.3% (67)	0.8% (184)	- (-)	18.2% (4,145)	0.1% (28)	- (-)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의 정책대상별 사업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4~'16년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각 년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 외식업 대상 사업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예비창업자와 소공인 대상의 사업수는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 건수기준의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14년에 소상공인(전체) 대상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이었으나 '15년에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수가 가장 많았고 '16년에 다시 소상공인(전체) 대상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예비창업자, 소공인 대상 사업은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에 감소
- 소상공인(전체) 사업수는 '15년에 전년 대비 감소 후 '16년에 30개로 증가
- 건수기준의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
- '14~'16년 전통시장과 외식업 대상 사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전체) 대상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표 3-13> 정책대상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예비 창업자	소상 공인 (전체)	소공인 (제조업)	소상인			전통 시장	프랜 차이즈	기타
					슈퍼마켓/ 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중 앙 부 처	'14	20.9% (9)	44.2% (19)	9.3% (4)	2.3% (1)	0.0% (0)	0.0% (0)	20.9% (9)	2.3% (1)	0.0% (0)
	'15	39.7% (25)	17.5% (11)	12.7% (8)	1.6% (1)	0.0% (0)	0.0% (0)	27.0% (17)	1.6% (1)	0.0% (0)
	'16	20.0% (14)	42.9% (30)	8.6% (6)	1.4% (1)	0.0% (0)	0.0% (0)	25.7% (18)	1.4% (1)	0.0% (0)
지 자 체	'14	3.7% (10)	28.6% (75)	6.3% (17)	1.9% (5)	11.9% (32)	2.2% (6)	44.0% (118)	1.5% (4)	0.4% (1)
	'15	4.2% (12)	24.9% (71)	5.6% (16)	1.8% (5)	11.6% (33)	2.1% (6)	47.7% (136)	1.8% (5)	0.4% (1)
	'16	1.3% (4)	21.3% (65)	5.6% (17)	1.0% (3)	17.7% (54)	0.0% (0)	51.5% (157)	1.6% (5)	0.0% (0)
전 체	'14	6.1% (19)	30.2% (94)	6.8% (21)	1.9% (6)	10.3% (32)	1.9% (6)	40.8% (127)	1.6% (5)	0.3% (1)
	'15	10.6% (37)	23.6% (82)	6.9% (24)	1.7% (6)	9.5% (33)	1.7% (6)	44.0% (153)	1.7% (6)	0.3% (1)
	'16	4.8% (18)	25.3% (95)	6.1% (23)	1.1% (4)	14.4% (54)	0.0% (0)	46.7% (175)	1.6% (6)	0.0% (0)

주 : ()는 건수

(5) 정책속성별

1) 정부 역할분담별 : 매칭분담과 독자담당형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예산이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금액기준을 보면, 분담하는 사업규모의 비중이 20% 내외 수준
- '14~'16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예산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15-18%

정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예산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35-63%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분담을 통해 추진

<표 3-14> 매칭·독자담당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매칭분담		18.1% (2,567)	16.3% (3,301)	15.0% (3,105)	37.3% (680)	64.2% (1,530)	46.7% (949)	20.3% (3,248)	21.3% (4,831)	17.8% (4,055)
독자 담당	중앙 정부	81.9% (11,619)	83.7% (16,990)	85.0% (17,595)	- (-)	- (-)	- (-)	72.6% (11,619)	74.9% (16,990)	77.4% (17,595)
	지자체	- (-)	- (-)	- (-)	62.7% (1,144)	35.8% (853)	53.3% (1,083)	7.1% (1,145)	3.8% (853)	4.8% (1,082)
	총계	100.0% (14,187)	100.0% (20,291)	100.0% (20,700)	100.0% (1,824)	100.0% (2,383)	100.0% (2,032)	100.0% (16,011)	100.0% (22,674)	100.0% (22,732)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보면, 분담하는 예산 사업규모의 비중이 14-24% 수준
- '14-'16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예산 지원사업 사업수의 14-23% 정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예산 지원사업 사업수의 14-86% 정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분담을 통해 추진

<표 3-15> 매칭·독자담당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매칭분담		14.0% (6)	22.2% (14)	18.6% (13)	14.2% (38)	19.6% (56)	23.9% (73)	14.1% (44)	20.1% (70)	22.9% (86)
독자 담당	중앙 정부	86.0% (37)	77.8% (49)	81.4% (57)	- (0)	- (0)	- (0)	11.9% (37)	14.1% (49)	15.2% (57)
	지자체	- (0)	- (0)	- (0)	85.8% (230)	80.4% (229)	76.1% (232)	74.0% (230)	65.8% (229)	61.9% (232)
	총계	100.0% (43)	100.0% (63)	100.0% (70)	100.0% (268)	100.0% (285)	100.0% (305)	100.0% (311)	100.0% (348)	100.0% (375)

주 : ()는 건수

2) 정부 역할분담별 : 협력·독자·병렬형

- 금액기준시 협력형의 예산 사업규모는 0.4-13% 수준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와의 사업간 관계에서 병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혼합형이 44-97% 수준

-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의 관계에서 21-24%가 병렬형

<표 3-16> 협력·독자·병렬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협력형	공동	0.2% (35)	6.3% (1,268)	4.9% (1,009)	37.3% (680)	64.2% (1,531)	46.2% (938)	4.5% (714)	12.3% (2,799)	8.6% (1,947)
	연계	- (-)	- (-)	- (-)	4.6% (84)	3.9% (92)	7.4% (151)	0.5% (84)	0.4% (92)	0.7% (151)
독자형		2.3% (324)	49.8% (10,104)	41.0% (8,496)	34.8% (636)	9.1% (217)	25.1% (510)	6.0% (959)	45.5% (10,321)	39.6% (9,006)
병렬형		- (-)	- (-)	- (-)	23.3% (425)	22.8% (544)	21.3% (432)	2.7% (425)	2.4% (544)	1.9% (432)
혼합형		97.5% (13,828)	44.0% (8,918)	54.1% (11,196)	- (-)	- (-)	- (-)	86.4% (13,828)	39.3% (8,918)	49.3% (11,196)
총계		100.0% (14,187)	100.0% (20,291)	100.0% (20,700)	100.0% (1,824)	100.0% (2,383)	100.0% (2,032)	100.0% (16,011)	100.0% (22,674)	100.0% (22,732)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볼 때, 협력형의 사업수 비중은 20%내 수준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의 경우 독자형 사업수의 비중이 48-58% 수준이고, 혼합형도 38-49% 수준
-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의 관계에서 병렬형이 19-36% 수준

<표 3-17> 협력·독자·병렬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협력형	공동	2.3% (1)	7.9% (5)	4.3% (3)	14.2% (38)	20.1% (56)	22.6% (69)	12.5% (39)	17.5% (61)	19.2% (72)
	연계	- (-)	- (-)	- (-)	16.8% (45)	14.0% (40)	16.1% (49)	14.5% (45)	11.5% (40)	13.1% (49)
독자형		48.8% (21)	52.4% (33)	57.1% (40)	38.4% (103)	31.2% (89)	42.3% (129)	39.9% (124)	35.1% (122)	45.1% (169)
병렬형		- (-)	- (-)	- (-)	30.6% (82)	35.1% (100)	19.0% (58)	26.4% (82)	28.7% (100)	15.5% (58)
혼합형		48.8% (21)	39.7% (25)	38.6% (27)	- (-)	- (-)	- (-)	6.8% (21)	7.2% (25)	7.2% (27)
총계		100.0% (43)	100.0% (63)	100.0% (70)	100.0% (268)	100.0% (285)	100.0% (305)	100.0% (311)	100.0% (348)	100.0% (375)

주 : ()는 건수

3) 정책목표별

- 금액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적응정책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은 99% 이상이 적응정책이고, 일부 보호정책 및 불리시정 정책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거의 적응정책으로 구분됨.

<표 3-18>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보호정책	0.4% (64)	0.5% (92)	0.4% (93)	0.0% (1)	0.0% (1)	0.1% (2)	0.4% (64)	0.4% (93)	0.4% (94)
적응정책	99.2% (14,066)	99.4% (20,164)	99.3% (20,574)	100.0% (1,824)	100.0% (2,382)	99.9% (2,030)	99.2% (15,890)	99.4% (22,546)	99.4% (22,604)
불리시정정책	0.4% (57)	0.2% (35)	0.2% (34)	- (-)	- (-)	- (-)	0.4% (57)	0.2% (35)	0.1% (34)
총계	100.0% (14,187)	100.0% (20,291)	100.0% (20,700)	100.0% (1,824)	100.0% (2,383)	100.0% (2,032)	100.0% (16,011)	100.0% (22,674)	100.0% (22,732)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수 98% 정도가 적응정책이고 보호정책이 1.5% 내외를 차지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은 지자체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나 불리시정 정책의 사업수 비중이 많고,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응정책의 사업수 비중이 많음.

<표 3-19>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보호정책	4.7% (2)	4.8% (3)	2.9% (2)	1.1% (3)	1.1% (3)	1.0% (3)	1.6% (5)	1.7% (6)	1.3% (5)
적응정책	93.0% (40)	93.7% (59)	95.7% (67)	98.9% (265)	98.9% (282)	99.0% (302)	98.1% (305)	98.0% (341)	98.4% (369)
불리시정정책	2.3% (1)	1.6% (1)	1.4% (1)	- (-)	- (-)	- (-)	0.3% (1)	0.3% (1)	0.3% (1)
총계	100.0% (43)	100.0% (63)	100.0% (70)	100.0% (268)	100.0% (285)	100.0% (305)	100.0% (311)	100.0% (348)	100.0% (375)

주 : ()는 건수

제4장 중앙·지자체간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및 정책과제

1. 정책 연계성과 유사·중복성 문제

- 정책의 역할분담을 기준으로 한 소상공인 정책유형을 분석해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있어서의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구조를 내역사업단위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 정책에서 매칭분담·독자담당, 협력형·독자형·병렬형 등으로 구분되는 소상공인 정책분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독자형)하거나 유사·중복(병렬형)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책전달 체계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표 4-1> 예산분담 또는 실행주체에 따른 정책의 특성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매칭분담	중앙정부·지자체	○	-	-
독자담당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	사각지대 해소	유사·중복

- 먼저 예산정책이건 비예산 정책이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칭분담 또는 독자담당 여부에 따라서 정책의 전달체계를 파악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거나 공동으로 비예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양 주체간에 소상공인 정책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정책의 필요예산이나 비예산 정책을 독자담당으로 추진하는 형태라면 정책 전달체계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중복정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됨.
- 사각지대를 지원하거나 중복정책일 가능성이 있는 독자담당에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연계성을 갖는다(연계협력)면 준협업(quasi-collaboration) 형태의 정책전달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²⁰⁾
- 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병렬적 관계가 많은 경우에 중복성이 심화된 구조임을 시사함.²¹⁾

20) 개념은 연계된 두 개 사업의 생산활동이 하나의 기업내로 통합된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과 시장거래(market transaction)의 중간형태로서 두 개의 기업이 연계하여 각각 생산활동을 하는 준통합(quasi-integration) 개념을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임.

21) 소상공인의 수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에서는 정책의 수로 보면 중복성이 문제로 보이지만 규모로 보면 부족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자체의 사업이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2. 정책의 연계성 분석 및 시사점

(1) 정책의 연계성 현황

- 금액기준에서 정책의 연계성 여부를 살펴보면, '16년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내 수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독자적인 사업은 40%내 수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업이 2% 미만 수준

<표 4-2> 정책의 연계성 및 유사·중복성 평가(2016년 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공동협력	연계협력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매칭분담 중앙정부·지자체	8.6% (1,947)	0.0% (11)	- (-)	- (-)	9.2% (2,096)	17.8% (4,055)
독자담당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 (-)	0.6% (140)	39.6% (9,006)	1.9% (432)	40.0% (9,100)	82.2% (18,678)
총계	8.6% (1,947)	0.7% (151)	39.6% (9,006)	1.9% (432)	49.3% (11,196)	100.0% (22,732)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보면, '16년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33%내 정도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독자적인 사업은 45%내 수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업이 16%내 수준

<표 4-2> 정책의 연계성 및 유사·중복성 평가(2016년 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공동협력	연계협력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매칭분담 중앙정부·지자체	19.2% (72)	1.1% (4)	- (0)	- (0)	2.7% (10)	22.9% (86)
독자담당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 (0)	12.0% (45)	45.1% (169)	15.5% (58)	4.5% (17)	77.1% (289)
총계	19.2% (72)	13.1% (49)	45.1% (169)	15.5% (58)	7.2% (27)	100.0% (375)

주 : ()는 건수

(2) 정책적 시사점

- 유사·중복성의 소상공인 정책 유형인 병렬형은 금액기준으로는 2% 미만의 적은 수준이지만 사업수 기준으로는 16%에 수준으로 조정을 위한 분석과 기구가 필요
- 유사·중복성의 사업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혜가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업조정 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성과에 대해 평가할 필요
-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C/T(Control-Tower) 구축 필요
-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의 중복여부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도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조정
- 중앙부처의 소상공인 정책이 지자체와 유사·중복되지 않는 경우(공동협력형·연계협력형·독자형)에 현행 유지
- 유사·중복(병렬형)이 되는 경우에 정책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부처가 추진할지 아니면 지자체가 추진할지를 급격한 정책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 다만 유사·중복의 경우에도 예산의 실링계약으로 인해 병렬형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정책추진 주체 이외에도 예산편성 체계에 대한 개편도 고려될 필요
- 유사·중복성 사업의 정책조정 기준은 지역특성적이거나 정책의 신속한 대응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담당하고, 고비용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추진
-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른 소상공인 부문의 정책은 지자체가 각자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
- 정보의 발달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
- 대규모 설비의 투입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담당
-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신속하게 충족시켜야 할 사업의 경우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서 추진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정책조정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책조정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일본이 사례로 볼 때에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일본의 경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역할조정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진행형
- 역할조정 작업은 서로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충분한 상호간의 입장표명이 되는 기회의 부여를 통해 수정·보완되는 과정이 필요하나 소비자의 관점도 고려될 필요

<부록 1> 복합적인 주요 유형분류별 현황 : 2016년 기준

(1) 생애주기 및 기능별

1) 금액기준

<부록 1-1-1>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9% (383)	- (-)	1.4% (285)	0.5% (100)	3.7% (768)
금융	6.5% (1,352)	- (-)	63.8% (13,203)	9.7% (2,009)	80.0% (16,563)
혁신.기술	- (-)	0.1% (18)	5.0% (1,031)	- (-)	5.1% (1,049)
마케팅	- (-)	- (-)	0.5% (110)	0.3% (70)	0.9% (180)
인프라	0.3% (67)	- (-)	9.0% (1,858)	1.0% (215)	10.3% (2,139)
총계	8.7% (1,802)	0.1% (18)	79.6% (16,487)	11.6% (2,393)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1-1-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0.0% (0)	2.1% (43)	1.2% (24)	- (-)	3.3% (67)
금융	0.6% (13)	10.3% (209)	33.5% (682)	3.1% (63)	47.6% (967)
혁신·기술	- (-)	- (-)	4.9% (100)	- (-)	4.9% (100)
마케팅	0.5% (11)	0.0% (0)	3.9% (80)	- (-)	4.5% (91)
인프라	0.1% (3)	0.3% (6)	38.2% (776)	1.0% (21)	39.7% (807)
총계	1.3% (27)	12.7% (259)	81.8% (1,662)	4.1% (84)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1-1-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7% (383)	0.2% (43)	1.4% (309)	0.4% (100)	3.7% (836)
금융	6.0% (1,365)	0.9% (209)	61.1% (13,884)	9.1% (2,072)	77.1% (17,530)
혁신·기술	- (-)	0.1% (18)	5.0% (1,131)	- (-)	5.1% (1,149)
마케팅	0.0% (11)	0.0% (0)	0.8% (189)	0.3% (70)	1.2% (271)
인프라	0.3% (70)	0.0% (6)	11.6% (2,635)	1.0% (235)	13.0% (2,946)
총계	8.0% (1,829)	1.2% (277)	79.8% (18,149)	10.9% (2,477)	100.0% (22,732)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1-2-1>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2.9% (9)	- (0)	7.1% (5)	1.4% (1)	21.4% (15)
금융	2.9% (2)	- (0)	8.6% (6)	10.0% (7)	21.4% (15)
혁신.기술	- (0)	1.4% (1)	24.3% (17)	- (0)	25.7% (18)
마케팅	- (0)	- (0)	4.3% (3)	1.4% (1)	5.7% (4)
인프라	7.1% (5)	- (0)	15.7% (11)	2.9% (2)	25.7% (18)
총계	22.9% (16)	1.4% (1)	60.0% (42)	15.7% (11)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1-2-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0.3% (1)	0.7% (2)	14.4% (44)	- (0)	15.4% (47)
금융	0.7% (2)	3.0% (9)	16.1% (49)	2.0% (6)	21.6% (66)
혁신.기술	- (0)	- (0)	13.4% (41)	- (0)	13.4% (41)
마케팅	0.7% (2)	0.3% (1)	27.9% (85)	- (0)	28.9% (88)
인프라	0.7% (2)	0.3% (1)	17.7% (54)	2.0% (6)	20.7% (63)
총계	2.3% (7)	4.3% (13)	89.5% (273)	3.9% (12)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1-2-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2.7% (10)	0.5% (2)	13.1% (49)	0.3% (1)	16.5% (62)
금융	1.1% (4)	2.4% (9)	14.7% (55)	3.5% (13)	21.6% (81)
혁신.기술	- (0)	0.3% (1)	15.5% (58)	- (0)	15.7% (59)
마케팅	0.5% (2)	0.3% (1)	23.5% (88)	0.3% (1)	24.5% (92)
인프라	1.9% (7)	0.3% (1)	17.3% (65)	2.1% (8)	21.6% (81)
총계	6.1% (23)	3.7% (14)	84.0% (315)	6.1% (23)	100.0% (375)

주 : ()는 건수

(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2-1-1>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예비창업자	7.8% (1,623)	- (-)	- (-)	- (-)	7.8% (1,623)
소상공인(전체)	- (-)	0.1% (18)	44.5% (9,203)	10.1% (2,098)	54.7% (11,319)
소공인	- (-)	- (-)	20.1% (4,168)	1.4% (285)	21.5% (4,453)
슈퍼마켓/나들가게	- (-)	- (-)	0.3% (62)	- (-)	0.3% (62)
외식업	- (-)	- (-)	- (-)	- (-)	- (-)
숙박업	- (-)	- (-)	- (-)	- (-)	- (-)
전통시장	0.9% (179)	- (-)	14.6% (3,030)	0.1% (11)	15.5% (3,219)
프랜차이즈	- (-)	- (-)	0.1% (25)	- (-)	0.1% (25)
기타	- (-)	- (-)	- (-)	- (-)	- (-)
총계	8.7% (1,802)	0.1% (18)	79.6% (16,487)	11.6% (2,393)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2-1-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예비창업자	0.7% (14)	- (-)	- (-)	- (-)	0.7% (14)
소상공인(전체)	- (-)	12.7% (259)	28.0% (569)	3.1% (64)	43.9% (892)
소공인	- (-)	- (-)	0.4% (8)	- (-)	0.4% (8)
슈퍼마켓/나들가게	- (-)	- (-)	0.1% (2)	0.1% (2)	0.2% (5)
외식업	- (-)	0.0% (0)	9.1% (184)	- (-)	9.1% (184)
숙박업	- (-)	- (-)	- (-)	- (-)	- (-)
전통시장	0.6% (13)	- (-)	44.0% (895)	0.9% (18)	45.6% (926)
프랜차이즈	- (-)	- (-)	0.2% (3)	- (-)	0.2% (3)
기타	- (-)	- (-)	- (-)	- (-)	- (-)
총계	1.3% (27)	12.7% (259)	81.8% (1,662)	4.1% (84)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2-1-3>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예비창업자	7.2% (1,638)	- (-)	- (-)	- (-)	7.2% (1,638)
소상공인(전체)	- (-)	1.2% (277)	43.0% (9,772)	9.5% (2,162)	53.7% (12,211)
소공인	- (-)	- (-)	18.4% (4,176)	1.3% (285)	19.6% (4,461)
슈퍼마켓/나들가게	- (-)	- (-)	0.3% (64)	0.0% (2)	0.3% (67)
외식업	- (-)	0.0% (0)	0.8% (184)	- (-)	0.8% (184)
숙박업	- (-)	- (-)	- (-)	- (-)	- (-)
전통시장	0.8% (192)	- (-)	17.3% (3,925)	0.1% (29)	18.2% (4,145)
프랜차이즈	- (-)	- (-)	0.1% (28)	- (-)	0.1% (28)
기타	- (-)	- (-)	- (-)	- (-)	- (-)
총계	8.0% (1,829)	1.2% (277)	79.8% (18,149)	10.9% (2,477)	100.0% (22,732)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2-2-1>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예비창업자	20.0% (14)	- (0)	- (0)	- (0)	20.0% (14)
소상공인(전체)	- (0)	1.4% (1)	31.4% (22)	10.0% (7)	42.9% (30)
소공인	- (0)	- (0)	4.3% (3)	4.3% (3)	8.6% (6)
슈퍼마켓/나들가게	- (0)	- (0)	1.4% (1)	- (0)	1.4% (1)
외식업	- (0)	- (0)	- (0)	- (0)	- (0)
숙박업	- (0)	- (0)	- (0)	- (0)	- (0)
전통시장	2.9% (2)	- (0)	21.4% (15)	1.4% (1)	25.7% (18)
프랜차이즈	- (0)	- (0)	1.4% (1)	- (0)	1.4% (1)
기타	- (0)	- (0)	- (0)	- (0)	- (0)
총계	22.9% (16)	1.4% (1)	60.0% (42)	15.7% (11)	100.0% (70)

주 : ()는 금액

<부록 2-2-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예비창업자	1.3% (4)	- (0)	- (0)	- (0)	1.3% (4)
소상공인(전체)	- (0)	3.9% (12)	15.4% (47)	2.0% (6)	21.3% (65)
소공인	- (0)	- (0)	5.6% (17)	- (0)	5.6% (17)
슈퍼마켓/나들가게	- (0)	- (0)	0.7% (2)	0.3% (1)	1.0% (3)
외식업	- (0)	0.3% (1)	17.4% (53)	- (0)	17.7% (54)
숙박업	- (0)	- (0)	- (0)	- (0)	- (-)
전통시장	1.0% (3)	- (0)	48.9% (149)	1.6% (5)	51.5% (157)
프랜차이즈	- (0)	- (0)	1.6% (5)	- (0)	1.6% (5)
기타	- (0)	- (0)	- (0)	- (0)	- (-)
총계	2.3% (7)	4.3% (13)	89.5% (273)	3.9% (12)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2-2-3>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예비창업자	4.8% (18)	- (0)	- (0)	- (0)	4.8% (18)
소상공인(전체)	- (0)	3.5% (13)	18.4% (69)	3.5% (13)	25.3% (95)
소공인	- (0)	- (0)	5.3% (20)	0.8% (3)	6.1% (23)
슈퍼마켓/나들가게	- (0)	- (0)	0.8% (3)	0.3% (1)	1.1% (4)
외식업	- (0)	0.3% (1)	14.1% (53)	- (0)	14.4% (54)
숙박업	- (0)	- (0)	- (0)	- (0)	- (-)
전통시장	1.3% (5)	- (0)	43.7% (164)	1.6% (6)	46.7% (175)
프랜차이즈	- (0)	- (0)	1.6% (6)	- (0)	1.6% (6)
기타	- (0)	- (0)	- (0)	- (0)	- (-)
총계	6.1% (23)	3.7% (14)	84.0% (315)	6.1% (23)	100.0% (375)

주 : ()는 건수

(3) 기능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3-1-1>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기능 정책대상	인력·고용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	전체
예비창업자	1.0% (205)	6.5% (1,352)	- (-)	- (-)	0.3% (67)	7.8% (1,623)
소상공인(전체)	1.1% (229)	51.8% (10,729)	1.5% (303)	0.1% (27)	0.2% (31)	54.7% (11,319)
소공인	- (-)	19.8% (4,100)	0.3% (68)	0.3% (70)	1.0% (215)	21.5% (4,453)
슈퍼마켓/나들가게	0.3% (62)	- (-)	- (-)	- (-)	- (-)	0.3% (62)
외식업	- (-)	- (-)	- (-)	- (-)	- (-)	- (-)
숙박업	- (-)	- (-)	- (-)	- (-)	- (-)	- (-)
전통시장	1.3% (272)	1.8% (383)	3.2% (654)	0.4% (83)	8.8% (1,827)	15.5% (3,219)
프랜차이즈	- (-)	- (-)	0.1% (25)	- (-)	- (-)	0.1% (25)
기타	- (-)	- (-)	- (-)	- (-)	- (-)	- (-)
총계	3.7% (768)	80.0% (16,563)	5.1% (1,049)	0.9% (180)	10.3% (2,139)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3-1-2>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기능 정책대상	인력·고용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	전체
예비창업자	0.0% (0)	0.6% (13)	- (-)	0.0% (1)	- (-)	0.7% (14)
소상공인(전체)	2.5% (50)	38.7% (785)	1.0% (21)	0.4% (9)	1.3% (26)	43.9% (892)
소공인	- (-)	- (-)	0.1% (1)	0.2% (4)	0.1% (2)	0.4% (8)
슈퍼마켓/나들가게	0.0% (0)	0.0% (-)	0.1% (2)	- (-)	0.1% (2)	0.2% (5)
외식업	0.2% (5)	8.1% (164)	0.4% (7)	0.3% (6)	0.1% (2)	9.1% (184)
숙박업	- (-)	- (-)	- (-)	- (-)	- (-)	- (-)
전통시장	0.6% (12)	0.2% (4)	3.2% (66)	3.4% (70)	38.1% (773)	45.6% (926)
프랜차이즈	- (-)	- (-)	0.1% (3)	0.0% (1)	0.0% (-)	0.2% (3)
기타	- (-)	- (-)	- (-)	- (-)	- (-)	- (-)
총계	3.3% (67)	47.6% (967)	4.9% (100)	4.5% (91)	39.7% (807)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3-1-3>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대상 \ 기능	인력·고용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	전체
예비창업자	0.9% (205)	6.0% (1,365)	- (-)	0.0% (1)	0.3% (67)	7.2% (1,638)
소상공인(전체)	1.2% (279)	50.7% (11,514)	1.4% (324)	0.2% (36)	0.3% (58)	53.7% (12,211)
소공인	- (-)	18.0% (4,100)	0.3% (69)	0.3% (74)	1.0% (217)	19.6% (4,461)
슈퍼마켓/나들가게	0.3% (63)	- (-)	0.0% (2)	- (-)	0.0% (2)	0.3% (67)
외식업	0.0% (5)	0.7% (164)	0.0% (7)	0.0% (6)	0.0% (2)	0.8% (184)
숙박업	- (-)	- (-)	- (-)	- (-)	- (-)	- (-)
전통시장	1.3% (285)	1.7% (387)	3.2% (720)	0.7% (153)	11.4% (2,600)	18.2% (4,145)
프랜차이즈	- (-)	- (-)	0.1% (27)	0.0% (1)	- (-)	0.1% (28)
기타	- (-)	- (-)	- (-)	- (-)	- (-)	- (-)
총계	3.7% (836)	77.1% (17,530)	5.1% (1,149)	1.2% (271)	13.0% (2,946)	100.0% (22,732)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3-2-1>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 기능	인력·고용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	전체
예비창업자	10.0% (7)	2.9% (2)	- (0)	- (0)	7.1% (5)	20.0% (14)
소상공인(전체)	5.7% (4)	14.3% (10)	12.9% (9)	1.4% (1)	8.6% (6)	42.9% (30)
소공인	- (0)	1.4% (1)	2.9% (2)	1.4% (1)	2.9% (2)	8.6% (6)
슈퍼마켓/나들가게	1.4% (1)	- (0)	- (0)	- (0)	- (0)	1.4% (1)
외식업	- (0)	- (0)	- (0)	- (0)	- (0)	- (0)
숙박업	- (0)	- (0)	- (0)	- (0)	- (0)	- (0)
전통시장	4.3% (3)	2.9% (2)	8.6% (6)	2.9% (2)	7.1% (5)	25.7% (18)
프랜차이즈	- (0)	- (0)	1.4% (1)	- (0)	- (0)	1.4% (1)
기타	- (0)	- (0)	- (0)	- (0)	- (0)	- (0)
총계	21.4% (15)	21.4% (15)	25.7% (18)	5.7% (4)	25.7% (18)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3-2-2>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 기능	인력·고용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	전체
예비창업자	0.3% (1)	0.7% (2)	- (0)	0.3% (1)	- (0)	1.3% (4)
소상공인(전체)	2.3% (7)	10.8% (33)	3.0% (9)	2.3% (7)	3.0% (9)	21.3% (65)
소공인	- (0)	- (0)	1.0% (3)	3.6% (11)	1.0% (3)	5.6% (17)
슈퍼마켓/나들가게	0.3% (1)	- (0)	0.3% (1)	- (0)	0.3% (1)	1.0% (3)
외식업	3.3% (10)	8.2% (25)	1.6% (5)	3.9% (12)	0.7% (2)	17.7% (54)
숙박업	- (0)	- (0)	- (0)	- (0)	- (0)	- (0)
전통시장	9.2% (28)	2.0% (6)	6.6% (20)	18.0% (55)	15.7% (48)	51.5% (157)
프랜차이즈	- (0)	- (0)	1.0% (3)	0.7% (2)	- (0)	1.6% (5)
기타	- (0)	- (0)	- (0)	- (0)	- (0)	- (0)
총계	15.4% (47)	21.6% (66)	13.4% (41)	28.9% (88)	20.7% (63)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3-2-3>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기능 정책대상	인력·고용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	전체
예비창업자	2.1% (8)	1.1% (4)	- (0)	0.3% (1)	1.3% (5)	4.8% (18)
소상공인(전체)	2.9% (11)	11.5% (43)	4.8% (18)	2.1% (8)	4.0% (15)	25.3% (95)
소공인	- (0)	0.3% (1)	1.3% (5)	3.2% (12)	1.3% (5)	6.1% (23)
슈퍼마켓/나들가게	0.5% (2)	- (0)	0.3% (1)	- (0)	0.3% (1)	1.1% (4)
외식업	2.7% (10)	6.7% (25)	1.3% (5)	3.2% (12)	0.5% (2)	14.4% (54)
숙박업	- (0)	- (0)	- (0)	- (0)	- (0)	- (0)
전통시장	8.3% (31)	2.1% (8)	6.9% (26)	15.2% (57)	14.1% (53)	46.7% (175)
프랜차이즈	- (0)	- (0)	1.1% (4)	0.5% (2)	- (0)	1.6% (6)
기타	- (0)	- (0)	- (0)	- (0)	- (0)	- (0)
총계	16.5% (62)	21.6% (81)	15.7% (59)	24.5% (92)	21.6% (81)	100.0% (375)

주 : ()는 건수

(4)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1) 금액기준

<부록 4-1-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0.1% (31)	- (-)	0.3% (62)	0.4% (93)
적응정책	4.9% (1,009)	- (-)	40.7% (8,431)	- (-)	53.8% (11,134)	99.4% (20,574)
불리시정정책	- (-)	- (-)	0.2% (34)	- (-)	0.2% (-)	0.4% (34)
총계	4.9% (1,009)	- (-)	41.0% (8,496)	- (-)	54.1% (11,196)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4-1-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0.0% (1)	0.0%- (1)	- (-)	0.1% (2)
적응정책	46.2% (938)	7.4% (151)	25.1% (510)	21.2% (431)	- (-)	99.9% (2,030)
불리시정정책	- (-)	- (-)	- (-)	- (-)	- (-)	- (-)
총계	46.2% (938)	7.4% (151)	25.1% (510)	21.3% (432)	- (-)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4-1-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0.1% (32)	- (1)	0.3% (62)	0.4% (94)
적응정책	8.6% (1,947)	0.7% (151)	39.3% (8,941)	1.9% (431)	49.0% (11,134)	99.4% (22,604)
불리시정정책	- (-)	- (-)	0.1% (34)	- (-)	- (-)	0.1% (34)
총계	8.6% (1,947)	0.7% (151)	39.6% (9,006)	1.9% (432)	49.3% (11,196)	100.0% (22,732)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4-2-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0)	- (0)	1.4% (1)	- (0)	1.4% (1)	2.9% (2)
적응정책	4.3% (3)	- (0)	54.3% (38)	- (0)	37.1% (26)	95.7% (67)
불리시정정책	- (0)	- (0)	1.4% (1)	- (0)	- (0)	1.4% (1)
총계	4.3% (3)	- (0)	57.1% (40)	- (0)	38.6% (27)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4-2-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0)	- (0)	0.7% (2)	0.3% (1)	- (0)	1.0% (3)
적응정책	22.6% (69)	16.1% (49)	41.6% (127)	18.7% (57)	- (0)	99.0% (302)
불리시정정책	- (0)	- (0)	- (0)	- (0)	- (0)	- (0)
총계	22.6% (70)	16.1% (48)	42.3% (129)	19.0% (58)	- (0)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4-2-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0)	- (0)	0.8% (3)	0.3% (1)	0.3% (1)	1.3% (5)
적응정책	19.2% (72)	13.1% (49)	44.0% (165)	15.2% (57)	6.9% (26)	98.4% (369)
불리시정정책	- (0)	- (0)	0.3% (1)	- (0)	- (0)	0.3% (1)
총계	19.2% (72)	13.1% (49)	45.1% (169)	15.5% (58)	7.2% (27)	100.0% (375)

주 : ()는 건수

(5)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1) 금액기준

<부록 5-1-1>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인력.교육	- (-)	- (-)	1.7% (349)	- (-)	2.0% (419)	3.7% (768)
금융	- (-)	- (-)	37.4% (7,733)	- (-)	42.7% (8,831)	80.0% (16,563)
혁신.기술	- (-)	- (-)	0.7% (150)	- (-)	4.3% (899)	5.1% (1,049)
마케팅	- (-)	- (-)	0.5% (97)	- (-)	0.4% (83)	0.9% (180)
인프라	4.9% (1,009)	- (-)	0.8% (166)	- (-)	4.7% (964)	10.3% (2,139)
총계	4.9% (1,009)	- (-)	41.0% (8,496)	- (-)	54.1% (11,196)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5-1-2>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인력.교육	0.4% (8)	0.0% (0)	0.3% (6)	2.6% (53)	- (-)	3.3% (67)
금융	10.8% (220)	1.0% (21)	20.1% (409)	15.6% (317)	- (-)	47.6% (967)
혁신.기술	2.0% (41)	0.9% (18)	1.2% (24)	0.9% (18)	- (-)	4.9% (100)
마케팅	0.7% (15)	1.4% (28)	1.1% (23)	1.2% (24)	- (-)	4.5% (91)
인프라	32.2% (654)	4.1% (84)	2.4% (49)	1.0% (20)	- (-)	39.7% (807)
총계	46.2% (938)	7.4% (151)	25.1% (510)	21.3% (432)	- (-)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5-1-3>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인력.교육	0.0% (8)	0.0% (0)	1.6% (356)	0.2% (53)	1.8% (419)	3.7% (836)
금융	1.0% (220)	0.1% (21)	35.8% (8,142)	1.4% (317)	38.8% (8,831)	77.1% (17,530)
혁신.기술	0.2% (41)	0.1% (18)	0.8% (174)	0.1% (18)	4.0% (899)	5.1% (1,149)
마케팅	0.1% (15)	0.1% (28)	0.5% (120)	0.1% (24)	0.4% (83)	1.2% (271)
인프라	7.3% (1,663)	0.4% (84)	0.9% (215)	0.1% (20)	4.2% (964)	13.0% (2,946)
총계	8.6% (1,947)	0.7% (151)	39.6% (9,006)	1.9% (432)	49.3% (11,196)	100.0% (22,732)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5-2-1>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인력.교육	- (0)	- (0)	12.9% (9)	- (0)	8.6% (6)	21.4% (15)
금융	- (0)	- (0)	11.4% (8)	- (0)	10.0% (7)	21.4% (15)
혁신.기술	- (0)	- (0)	14.3% (10)	- (0)	11.4% (8)	25.7% (18)
마케팅	- (0)	- (0)	2.9% (2)	- (0)	2.9% (2)	5.7% (4)
인프라	4.3% (3)	- (0)	15.7% (11)	- (0)	5.7% (4)	25.7% (18)
총계	4.3% (3)	- (0)	57.1% (40)	- (0)	38.6% (27)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5-2-2>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인력.교육	4.3% (13)	0.3% (1)	5.9% (18)	4.9% (15)	- (0)	15.4% (47)
금융	1.3% (4)	1.0% (3)	13.8% (42)	5.6% (17)	- (0)	21.6% (66)
혁신.기술	3.0% (9)	3.3% (10)	5.2% (16)	2.0% (6)	- (0)	13.4% (41)
마케팅	5.6% (17)	6.2% (19)	11.8% (36)	5.2% (16)	- (0)	28.9% (88)
인프라	8.5% (26)	5.2% (16)	5.6% (17)	1.3% (4)	- (0)	20.7% (63)
총계	22.6% (69)	16.1% (49)	42.3% (129)	19.0% (58)	- (0)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5-2-3>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인력.교육	3.5% (13)	0.3% (1)	7.2% (27)	4.0% (15)	1.6% (6)	16.5% (62)
금융	1.1% (4)	0.8% (3)	13.3% (50)	4.5% (17)	1.9% (7)	21.6% (81)
혁신.기술	2.4% (9)	2.7% (10)	6.9% (26)	1.6% (6)	2.1% (8)	15.7% (59)
마케팅	4.5% (17)	5.1% (19)	10.1% (38)	4.3% (16)	0.5% (2)	24.5% (92)
인프라	7.7% (29)	4.3% (16)	7.5% (28)	1.1% (4)	1.1% (4)	21.6% (81)
총계	19.2% (72)	13.1% (49)	45.1% (169)	15.5% (58)	7.2% (27)	100.0% (375)

주 : ()는 건수

(6) 정책목표 및 기능별

1) 금액기준

<부록 6-1-1>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인력.교육	0.3% (62)	3.4% (706)	- (-)	3.7% (768)
금융	0.1% (31)	79.9% (16,533)	- (-)	80.0% (16,563)
혁신.기술	- (-)	5.1% (1,049)	- (-)	5.1% (1,049)
마케팅	- (-)	0.9% (180)	- (-)	0.9% (180)
인프라	- (-)	10.2% (2,106)	0.2% (34)	10.3% (2,139)
총계	0.4% (93)	99.4% (20,574)	0.2% (34)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6-1-2>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인력.교육	- (-)	3.3% (67)	- (-)	3.3% (67)
금융	- (-)	47.6% (967)	- (-)	47.6% (967)
혁신.기술	0.0% (1)	4.9% (99)	- (-)	4.9% (100)
마케팅	- (-)	4.5% (91)	- (-)	4.5% (91)
인프라	0.0% (1)	39.7% (806)	- (-)	39.7% (807)
총계	0.1% (2)	99.9% (2,030)	- (-)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6-1-3>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인력.교육	0.3% (62)	3.4% (774)	- (-)	3.7% (836)
금융	0.1% (31)	77.0% (17,500)	- (-)	77.1% (17,530)
혁신.기술	0.0% (1)	5.1% (1,149)	- (-)	5.1% (1,149)
마케팅	- (-)	1.2% (271)	- (-)	1.2% (271)
인프라	0.0% (1)	12.8% (2,912)	0.1% (34)	13.0% (2,946)
총계	0.4% (94)	99.4% (22,604)	0.1% (34)	100.0% (22,732)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6-2-1>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인력.교육	1.4% (1)	20.0% (14)	- (0)	21.4% (15)
금융	1.4% (1)	20.0% (14)	- (0)	21.4% (15)
혁신.기술	- (0)	25.7% (18)	- (0)	25.7% (18)
마케팅	- (0)	5.7% (4)	- (0)	5.7% (4)
인프라	- (0)	24.3% (17)	1.4% (1)	25.7% (18)
총계	2.9% (2)	95.7% (67)	1.4% (1)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6-2-2>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인력.교육	- (0)	15.4% (47)	- (0)	15.4% (47)
금융	- (0)	21.6% (66)	- (0)	21.6% (66)
혁신.기술	0.7% (2)	12.8% (39)	- (0)	13.4% (41)
마케팅	- (0)	28.9% (88)	- (0)	28.9% (88)
인프라	0.3% (1)	20.3% (62)	- (0)	20.7% (63)
총계	1.0% (3)	99.0% (302)	- (0)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6-2-3>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인력.교육	0.3% (1)	16.3% (61)	- (0)	16.5% (62)
금융	0.3% (1)	21.3% (80)	- (0)	21.6% (81)
혁신.기술	0.5% (2)	15.2% (57)	- (0)	15.7% (59)
마케팅	- (0)	24.5% (92)	- (0)	24.5% (92)
인프라	0.3% (1)	21.1% (79)	0.3% (1)	21.6% (81)
총계	1.3% (5)	98.4% (369)	0.3% (1)	100.0% (375)

주 : ()는 건수

(7)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1) 금액기준

<부록 7-1-1>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속성 생애주기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	- (-)	1.5% (314)	- (-)	7.2% (1,488)	8.7% (1,802)
창업 및 성장	- (-)	- (-)	0.1% (18)	- (-)	- (-)	0.1% (18)
성장	4.9% (1,009)	- (-)	30.5% (6,322)	- (-)	44.2% (9,157)	79.6% (16,487)
퇴로 및 안전망	- (-)	- (-)	8.9% (1,842)	- (-)	2.7% (551)	11.6% (2,393)
총계	4.9% (1,009)	- (-)	41.0% (8,496)	- (-)	54.1% (11,196)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7-1-2>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속성 생애주기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	0.6% (13)	0.0% (1)	0.7% (13)	- (-)	1.3% (27)
창업 및 성장	- (-)	- (-)	10.4% (212)	2.3% (47)	- (-)	12.7% (259)
성장	45.7% (928)	5.6% (114)	13.7% (279)	16.8% (341)	- (-)	81.8% (1,662)
퇴로 및 안전망	0.5% (10)	1.2% (24)	0.9% (19)	1.5% (31)	- (-)	4.1% (84)
총계	46.2% (938)	7.4% (151)	25.1% (510)	21.3% (432)	- (-)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7-1-3>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속성 생애주기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	0.1% (13)	1.4% (315)	0.1% (13)	6.5% (1,488)	8.0% (1,829)
창업 및 성장	- (-)	- (-)	1.0% (230)	0.2% (47)	- (-)	1.2% (277)
성장	8.5% (1,937)	0.5% (114)	29.0% (6,601)	1.5% (341)	40.3% (9,157)	79.8% (18,149)
퇴로 및 안전망	0.0% (10)	0.1% (24)	8.2% (1,861)	0.1% (31)	2.4% (551)	10.9% (2,477)
총계	8.6% (1,947)	0.7% (151)	39.6% (9,006)	1.9% (432)	49.3% (11,196)	100.0% (22,732)

주 : ()는 금액

정책속성 생애주기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0)	1.0% (3)	0.3% (1)	1.0% (3)	- (0)	2.3% (7)
창업 및 성장	- (0)	- (0)	3.3% (10)	1.0% (3)	- (0)	4.3% (13)
성장	22.0% (67)	14.1% (43)	37.7% (115)	15.7% (48)	- (0)	89.5% (273)
퇴로 및 안전망	0.7% (2)	1.0% (3)	1.0% (3)	1.3% (4)	- (0)	3.9% (12)
총계	22.6% (69)	15.7% (49)	42.3% (129)	19.0% (58)	- (0)	100.0% (305)

주 : 건수기준, ()는 건수

<부록 7-2-3>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속성 생애주기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0)	0.8% (3)	3.7% (14)	0.8% (3)	0.8% (3)	6.1% (23)
창업 및 성장	- (0)	- (0)	2.9% (11)	0.8% (3)	- (0)	3.7% (14)
성장	18.7% (70)	11.5% (43)	35.7% (134)	12.8% (48)	5.3% (20)	84.0% (315)
퇴로 및 안전망	0.5% (2)	0.8% (3)	2.7% (10)	1.1% (4)	1.1% (4)	6.1% (23)
총계	19.2% (72)	13.1% (49)	45.1% (169)	15.5% (58)	7.2% (27)	100.0% (375)

주 : 건수기준, ()는 건수

(8)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1) 금액기준

<부록 8-1-1>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부록 7-2-1>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속성 생애주기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0)	- (0)	18.6% (13)	- (0)	4.3% (3)	22.9% (16)
창업 및 성장	- (0)	- (0)	1.4% (1)	- (0)	- (0)	1.4% (1)
성장	4.3% (3)	- (0)	27.1% (19)	- (0)	28.6% (20)	60.0% (42)
퇴로 및 안전망	- (0)	- (0)	10.0% (7)	- (0)	5.7% (4)	15.7% (11)
총계	4.3% (3)	- (0)	57.1% (40)	- (0)	38.6% (27)	100.0% (70)

주 : 건수기준, ()는 건수

<부록 7-2-2>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8.5% (1,768)	0.2% (34)	8.7% (1,802)
창업 및 성장	- (-)	0.1% (18)	- (-)	0.1% (18)
성장	0.4% (93)	79.2% (16,395)	- (-)	79.6% (16,487)
퇴로 및 안전망	- (-)	11.6% (2,393)	- (-)	11.6% (2,393)
총계	0.4% (93)	99.4% (20,574)	0.2% (34)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8-1-2>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1.3% (27)	- (-)	1.3% (27)
창업 및 성장	- (-)	12.7% (259)	- (-)	12.7% (259)
성장	0.0% (1)	81.7% (1,661)	- (-)	81.8% (1,662)
퇴로 및 안전망	0.0% (1)	4.1% (83)	- (-)	4.1% (84)
총계	0.1% (2)	99.9% (2,030)	- (-)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8-1-3>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7.9% (1,795)	0.1% (34)	8.0% (1,829)
창업 및 성장	- (-)	1.2% (277)	- (-)	1.2% (277)
성장	0.4% (94)	79.4% (18,055)	- (-)	79.8% (18,149)
퇴로 및 안전망	0.0% (1)	10.9% (2,476)	- (-)	10.9% (2,477)
총계	0.4% (94)	99.4% (22,604)	0.1% (34)	100.0% (22,732)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8-2-1>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21.4% (15)	1.4% (1)	22.9% (16)
창업 및 성장	- (-)	1.4% (1)	- (-)	1.4% (1)
성장	2.9% (2)	57.1% (40)	- (-)	60.0% (42)
퇴로 및 안전망	- (-)	15.7% (11)	- (-)	15.7% (11)
총계	2.9% (2)	95.7% (67)	1.4% (1)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8-2-2>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0)	2.3% (7)	- (0)	2.3% (7)
창업 및 성장	- (0)	4.3% (13)	- (0)	4.3% (13)
성장	0.7% (2)	88.9% (271)	- (0)	89.5% (273)
퇴로 및 안전망	0.3% (1)	3.6% (11)	- (0)	3.9% (12)
총계	1.0% (3)	99.0% (302)	- (0)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8-2-3>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0)	5.9% (22)	0.3% (1)	6.1% (23)
창업 및 성장	- (0)	3.7% (14)	- (0)	3.7% (14)
성장	1.1% (4)	82.9% (311)	- (0)	84.0% (315)
퇴로 및 안전망	0.3% (1)	5.9% (22)	- (0)	6.1% (23)
총계	1.3% (5)	98.4% (369)	0.3% (1)	100.0% (375)

주 : ()는 건수

(9)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9-1-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대상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예비창업자	- (-)	- (-)	0.9% (186)	- (-)	6.9% (1,437)	7.8% (1,623)
소상공인 (전체)	- (-)	- (-)	18.6% (3,842)	- (-)	36.1% (7,477)	54.7% (11,319)
소공인	- (-)	- (-)	20.8% (4,310)	- (-)	0.7% (143)	21.5% (4,453)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 (-)	- (-)	0.3% (62)	0.3% (62)
외식업	- (-)	- (-)	- (-)	- (-)	- (-)	- (-)
숙박업	- (-)	- (-)	- (-)	- (-)	- (-)	- (-)
전통시장	4.9% (1,009)	- (-)	0.8% (157)	- (-)	9.9% (2,053)	15.5% (3,219)
프랜차이즈	- (-)	- (-)	- (-)	- (-)	0.1% (25)	0.1% (25)
기타	- (-)	- (-)	- (-)	- (-)	- (-)	- (-)
총계	4.9% (1,009)	- (-)	41.0% (8,496)	- (-)	54.1% (11,196)	100.0% (20,700)

<부록 9-1-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대상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예비창업자	- (-)	- (-)	0.0% (1)	0.7% (13)	- (-)	0.7% (14)
소상공인 (전체)	10.9% (222)	1.4% (28)	14.1% (287)	17.5% (355)	- (-)	43.9% (892)
소공인	0.1% (2)	- (-)	0.3% (6)	- (-)	- (-)	0.4% (8)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2% (4)	0.0% (0)	- (-)	0.2% (5)
외식업	- (-)	- (-)	9.1% (184)	- (-)	- (-)	9.1% (184)
숙박업	- (-)	- (-)	- (-)	- (-)	- (-)	- (-)
전통시장	35.2% (715)	6.1% (123)	1.3% (27)	3.0% (61)	- (-)	45.6% (926)
프랜차이즈	- (-)	0.0% (0)	0.0% (0)	0.1% (3)	- (-)	0.2% (3)
기타	- (-)	- (-)	- (-)	- (-)	- (-)	- (-)
총계	46.2% (938)	7.4% (151)	25.1% (510)	21.3% (432)	- (-)	100.0% (2,032)

<부록 9-1-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대상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예비창업자	- (-)	- (-)	0.8% (187)	0.1% (13)	6.3% (1,437)	7.2% (1,638)
소상공인 (전체)	1.0% (222)	0.1% (28)	18.2% (4,129)	1.6% (355)	32.9% (7,477)	53.7% (12,211)
소공인	0.0% (2)	- (-)	19.0% (4,316)	- (-)	0.6% (143)	19.6% (4,46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0% (4)	0.0% (0)	0.3% (62)	0.3% (67)
외식업	- (-)	- (-)	0.8% (184)	- (-)	- (-)	0.8% (184)
숙박업	- (-)	- (-)	- (-)	- (-)	- (-)	- (-)
전통시장	7.6% (1,724)	0.5% (123)	0.8% (184)	0.3% (61)	9.0% (2,053)	18.2% (4,145)
프랜차이즈	- (-)	0.0% (0)	0.0% (0)	0.0% (3)	0.1% (25)	0.1% (28)
기타	- (-)	- (-)	- (-)	- (-)	- (-)	- (-)
총계	8.6% (1,947)	0.7% (151)	39.6% (9,006)	1.9% (432)	49.3% (11,196)	100.0% (22,732)

주 : ()는 금액

정책대상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예비창업자	- (0)	- (0)	17.1% (12)	- (0)	2.9% (2)	20.0% (14)
소상공인 (전체)	- (0)	- (0)	30.0% (21)	- (0)	12.9% (9)	42.9% (30)
소공인	- (0)	- (0)	7.1% (5)	- (0)	1.4% (1)	8.6% (6)
슈퍼마켓/ 나들가게	- (0)	- (0)	- (0)	- (0)	1.4% (1)	1.4% (1)
외식업	- (0)	- (0)	- (0)	- (0)	- (0)	- (0)
숙박업	- (0)	- (0)	- (0)	- (0)	- (0)	- (0)
전통시장	4.3% (3)	- (0)	2.9% (2)	- (0)	18.6% (13)	25.7% (18)
프랜차이즈	- (0)	- (0)	- (0)	- (0)	1.4% (1)	1.4% (1)
기타	- (0)	- (0)	- (0)	- (0)	- (-)	- (-)
총계	4.3% (3)	- (0)	57.1% (40)	- (0)	28.6% (27)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9-2-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부록 9-2-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예비창업자	- (0)	- (0)	0.3% (1)	1.0% (3)	- (0)	1.3% (4)
소상공인 (전체)	1.3% (4)	1.6% (5)	10.5% (32)	7.9% (24)	- (0)	21.3% (65)
소공인	0.7% (2)	- (0)	4.9% (15)	- (0)	- (0)	5.6% (17)
슈퍼마켓/ 나들가게	- (0)	- (0)	0.7% (2)	0.3% (1)	- (0)	1.0% (3)
외식업	- (0)	- (0)	17.7% (54)	- (0)	- (0)	17.7% (54)
숙박업	- (0)	- (0)	- (0)	- (0)	- (0)	- (0)
전통시장	20.7% (63)	14.1% (43)	7.5% (23)	9.2% (28)	- (0)	51.5% (157)
프랜차이즈	- (0)	0.3% (1)	0.7% (2)	0.7% (2)	- (0)	1.6% (5)
기타	- (0)	- (0)	- (0)	- (-)	- (0)	- (0)
총계	22.6% (69)	16.1% (49)	42.3% (129)	19.0% (58)	- (0)	100.0% (305)

<부록 9-2-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예비창업자	- (0)	- (0)	3.5% (13)	0.8% (3)	0.5% (2)	4.8% (18)
소상공인 (전체)	1.1% (4)	1.3% (5)	14.1% (53)	6.4% (24)	2.4% (9)	25.3% (95)
소공인	0.5% (2)	- (0)	5.3% (20)	- (0)	0.3% (1)	6.1% (23)
슈퍼마켓/나들가게	- (0)	- (0)	0.5% (2)	0.3% (1)	0.3% (1)	1.1% (4)
외식업	- (0)	- (0)	14.4% (54)	- (0)	- (0)	14.4% (54)
숙박업	- (0)	- (0)	- (0)	- (0)	- (0)	- (0)
전통시장	17.6% (66)	11.5% (43)	6.7% (25)	7.5% (28)	3.5% (13)	46.7% (175)
프랜차이즈	- (0)	0.3% (1)	0.5% (2)	0.5% (2)	0.3% (1)	1.6% (6)
기타	- (0)	- (0)	- (0)	- (0)	- (0)	- (0)
총계	19.2% (72)	13.1% (49)	45.1% (169)	15.5% (58)	7.2% (27)	100.0% (375)

주 : ()는 건수

(10)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10-1-1>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예비창업자	- (-)	7.7% (1,590)	0.2% (34)	7.8% (1,623)
소상공인(전체)	0.1% (31)	54.5% (11,288)	- (-)	54.7% (11,319)
소공인	- (-)	21.5% (4,453)	- (-)	21.5% (4,453)
슈퍼마켓/나들가게	0.3% (62)	- (-)	- (-)	0.3% (62)
외식업	- (-)	- (-)	- (-)	- (-)
숙박업	- (-)	- (-)	- (-)	- (-)
전통시장	- (-)	15.5% (3,219)	- (-)	15.5% (3,219)
프랜차이즈	- (-)	0.1% (25)	- (-)	0.1% (25)
기타	- (-)	- (-)	- (-)	- (-)
총계	0.4% (93)	99.4% (20,574)	0.2% (34)	100.0% (20,700)

주 : ()는 금액

<부록 10-1-2>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예비창업자	- (-)	0.7% (14)	- (-)	0.7% (14)
소상공인(전체)	0.1% (1)	43.8% (890)	- (-)	43.9% (892)
소공인	- (-)	0.4% (8)	- (-)	0.4% (8)
슈퍼마켓/나들가게	- (-)	0.2% (5)	- (-)	0.2% (5)
외식업	- (-)	9.1% (184)	- (-)	9.1% (184)
숙박업	- (-)	- (-)	- (-)	- (-)
전통시장	- (-)	45.6% (926)	- (-)	45.6% (926)
프랜차이즈	0.0% (0)	0.1% (3)	- (-)	0.2% (3)
기타	- (-)	- (-)	- (-)	- (-)
총계	0.1% (2)	99.9% (2,030)	- (-)	100.0% (2,032)

주 : ()는 금액

<부록 10-1-3>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1억 원)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예비창업자	- (-)	7.1% (1,604)	0.1% (34)	7.2% (1,638)
소상공인(전체)	0.1% (32)	53.6% (12,178)	- (-)	53.7% (12,211)
소공인	- (-)	19.6% (4,461)	- (-)	19.6% (4,461)
슈퍼마켓/나들가게	0.3% (62)	0.0% (5)	- (-)	0.3% (67)
외식업	- (-)	0.8% (184)	- (-)	0.8% (184)
숙박업	- (-)	- (-)	- (-)	- (-)
전통시장	- (-)	18.2% (4,145)	- (-)	18.2% (4,145)
프랜차이즈	0.0% (0)	0.1% (28)	- (-)	0.1% (28)
기타	- (-)	- (-)	- (-)	- (-)
총계	0.4% (94)	99.4% (22,604)	0.1% (34)	100.0% (22,732)

주 : 건수기준, ()는 건수

2) 건수기준

<부록 10-2-1>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예비창업자	- (0)	18.6% (13)	1.4% (1)	20.0% (14)
소상공인(전체)	1.4% (1)	41.4% (29)	- (0)	42.9% (30)
소공인	- (0)	8.6% (6)	- (0)	8.6% (6)
슈퍼마켓/나들가게	1.4% (1)	- (0)	- (0)	1.4% (1)
외식업	- (0)	- (0)	- (0)	- (0)
숙박업	- (0)	- (0)	- (0)	- (0)
전통시장	- (0)	25.7% (18)	- (0)	25.7% (18)
프랜차이즈	- (0)	1.4% (1)	- (0)	1.4% (1)
기타	- (0)	- (0)	- (0)	- (0)
총계	2.9% (2)	95.7% (67)	1.4% (1)	100.0% (70)

주 : ()는 건수

<부록 10-2-2>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예비창업자	- (0)	1.3% (4)	- (0)	1.3% (4)
소상공인(전체)	0.7% (2)	20.7% (63)	- (0)	21.3% (65)
소공인	- (0)	5.6% (17)	- (0)	5.6% (17)
슈퍼마켓/나들가게	- (0)	1.0% (3)	- (0)	1.0% (3)
외식업	- (0)	17.7% (54)	- (0)	17.7% (54)
숙박업	- (0)	- (0)	- (0)	- (0)
전통시장	- (0)	51.5% (157)	- (0)	51.5% (157)
프랜차이즈	0.3% (1)	1.3% (4)	- (0)	1.6% (5)
기타	- (0)	- (0)	- (0)	- (0)
총계	1.0% (3)	99.0% (302)	- (0)	100.0% (305)

주 : ()는 건수

<부록 10-2-3>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예비창업자	- (0)	4.5% (17)	0.3% (1)	4.8% (18)
소상공인(전체)	0.8% (3)	24.5% (92)	- (0)	25.3% (95)
소공인	- (0)	6.1% (23)	- (0)	6.1% (23)
슈퍼마켓/나들가게	0.3% (1)	0.8% (3)	- (0)	1.1% (4)
외식업	- (0)	14.4% (54)	- (0)	14.4% (54)
숙박업	- (0)	- (0)	- (0)	- (-)
전통시장	- (0)	46.7% (175)	- (0)	46.7% (175)
프랜차이즈	0.3% (1)	1.3% (5)	- (0)	1.6% (6)
기타	- (0)	- (0)	- (0)	- (-)
총계	1.3% (5)	98.4% (369)	0.3% (1)	100.0% (375)

주 : ()는 건수